

(2017 ~ 2021)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2016. 12.



농림축산식품부

목 차

I. 종합계획 수립 개요	1
1. 계획 수립 배경	3
2. 그간 정책 및 성과	4
3. 미흡한 점	6
II. 여건 및 정책 방향	7
1. 여건 및 전망	9
2. 귀농·귀촌 실태 및 시사점	11
III. 비전과 목표	15
IV. 세부 추진계획	19
1. 청년층의 농업 창업 중점 지원	21
2. 교육체계 개편 및 내실화	23
3. 일자리·주거 등 안정적 정착 지원 강화	24
4. 귀농귀촌 저변 확대	26
5. 지역 주민과의 융화지원 강화 및 지원체계 개편	27
【참고】	
1. 종합계획 시행후 변화된 모습	28
2. 종합계획 목표 및 성과지표	29
3. 귀농·귀촌의 사회적 편익	30
4.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의 근거 및 내용	31
5.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수립 경과	32
6. 2009년 및 2012년 대책 개요	33
7. 귀농·귀촌 통합서비스 체계도	34
【부록】	
2016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요약보고서	35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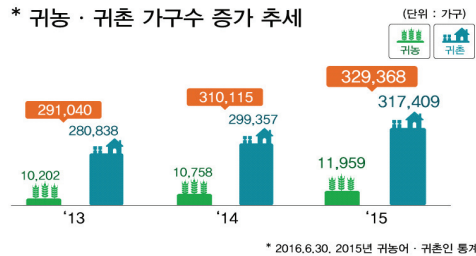
종합계획 수립 개요

I. 종합계획 수립 개요

1 계획수립 배경

□ '98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등장한 귀농·귀촌 흐름이 '08년 금융위기, 저성장,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생태 가치 선호 등으로 '10년 이후 급증

○ 최근 귀농·귀촌은 도시의 압출 요인과 농촌의 흡인요인이 사회 구조적 요인과 맞물리면서 지속적 사회 트렌드로 부각



□ 도시민 농촌 유입을 통한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력 창출을 위하여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사업 추진

○ 귀농귀촌종합센터 설치('14),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5)

○ 귀농·귀촌 단계별로 정보제공·귀농 교육, 농지·주택 마련을 지원하고,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도시민 유치지원 프로그램 추진

< 귀농·귀촌 단계별 지원 정책 >

관심단계	실행단계	정책단계
정보제공, 교육 실시 ○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 ○ 귀농귀촌창업박람회 ○ 귀농귀촌 교육	귀농인의 연락처 지원 ○ 도시민농촌 유치지원 ○ 귀농인의 집 조성 ○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창업자금, 영농기술 지원 ○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귀농인 실습지원(농진청) ○ 정책자금 지원 조건 완화

□ 그간 양적확대의 성과가 있었으나 귀농 초기 소득감소, 일자리 부족, 지역민과 갈등은 해결해야 될 과제로 대두

▣ 귀농·귀촌 여건전망, 실태조사 결과 및 그간 정책 평가를 기초로 농촌 활력 증대를 위한 5년 단위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수립

2

그간 정책 및 성과

가 그동안의 주요 정책

◆ '08년 금융위기 이후 크게 늘어난 귀농·귀촌인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2차에 걸쳐 귀농·귀촌 지원 대책 수립·추진('09, '12)

□ (관심단계) 귀농귀촌종합센터를 신설하고 정보제공 및 교육 실시

- 온·오프라인 상담서비스, 정책정보, 빈집정보 등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 단계별·품목별 영농 기술교육, 농산물 가공·유통, 농촌생활 등 다양한 교육과정 개설

* 단계별(기초·중급·심화·귀촌과정)·유형별(대학생·경찰·제대군인 등)과정 운영

□ (실행단계) 귀농초기 주요 애로사항인 주거문제 해소에 집중

- 귀농인의 집 조성(100개소)을 통해 임시 거주, 영농기반 마련 지원
-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8개소) 운영을 통해 가족단위 농업·농촌 체험 및 영농기술 습득 기회 제공

* 체류형센터 : ('13) 제천·영주 → ('14) 홍천·구례·금산 → ('15) 고창·영천 → ('16) 함양

□ (정착단계) 지자체 현장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귀농창업·정착 지원

- 귀농 창업 및 정착 지원을 위해 영농기술, 자금 지원 확대

* 귀농창업자금 : ('12) 500억원 → ('13) 600 → ('14) 700 → ('15) 1,000 → ('16) 1,500

- 지자체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확대, 현장 상담, 기존 주민과의 융화프로그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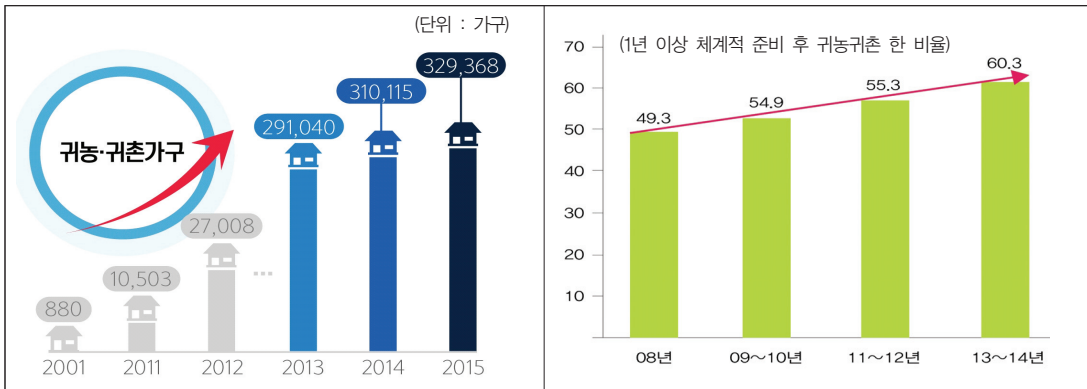
* 지자체 귀농귀촌지원센터 : ('09) 10개 시·군 → ('16) 50

나 정책 성과

◆ 귀농·귀촌 인구의 지속적 증가,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성과 가시화

□ 사회적 흐름을 정책적으로 뒷받침 하여 귀농·귀촌이 크게 증가

- 사전 정보제공·교육·실습지원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준비한 귀농·귀촌인 증가



* 귀촌 기준 : '12년까지 전원생활 목적 이주 대상으로 한정, '13년부터 목적과 무관하게 도시에서 1년 거주 후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 모두 포함되어 귀촌가구 크게 증가

□ 귀농·귀촌인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촌 활력 기여 사례 확대

- 다양한 경험, 전문성을 가진 귀농·귀촌인이 지역 공동체 리더, 6차 산업 창업, 농촌 공동체 활성화 등으로 지역 역동성 제고

* 고창군 마을이장 중 10%, 강원도 6차 산업 창업자 중 42%가 귀농·귀촌인
 * 농촌의 40대 이하 중 귀농·귀촌인이 42.9%, 신규 취농가구 중 귀농가구가 53.1%
 * 귀농·귀촌인의 생산자조직 참여율은 농업인 23%의 2배(59.6%)

□ 법률과 기구 등 귀농귀촌 지원정책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

- 귀농귀촌종합센터 설치('14),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5)
- 지자체 귀농귀촌지원센터 확충(50개소)으로 현장 상담, 정보 제공

- ◆ 양적확대에 치중하여 체계적인 정착지원 및 지역사회 융화 등 내실화 미흡
- ◆ 귀농·귀촌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종합적 거버넌스 구축 미흡

□ 은퇴자 등 도시민의 농촌 유치를 위한 양적 확대는 이루었으나, 젊고 유능한 청년 후계 인력 유입과 소득창출 지원 한계

☞ 2030세대 등 청년층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소득·일자리·창업 지원 등 타깃별 맞춤형 지원 정책 강화

□ 공급자 중심 지원 정책으로 수요자 관점의 종합적·체계적 지원에 한계

☞ 정책·정보제공 등 귀농·귀촌 지원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수요자 요구와 특성을 반영한 교육체계 개편

□ 귀농·귀촌 개인에 중점을 둔 정책 추진으로 기존 지역민과의 공동체 융화 지원에 한계

☞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간 융화지원을 강화하고 공동체 활력 창출 프로그램 강구

□ 귀농 중심의 정책 지원으로 귀촌인에 대한 정책적 고려 부족

☞ 귀촌인의 농업 취·창업 지원, 농촌 지역의 다양한 서비스 수요와의 연계 등 귀촌인에 대한 정책 지원기능 강화

□ 중앙과 지방, 민간조직간 연계 협력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 한계

☞ 중앙과 지방, 민간의 지원조직을 연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귀농귀촌 지원 시스템 구축

II

여건 및 정책 방향

II. 여건 및 정책 방향

1 여건 및 전망

가 귀농·귀촌 정책 여건

□ (기회 요인) 전원생활, 생태적 가치 선호 증가와 함께 미래산업으로서의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 변화로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 확대

* 귀농·귀촌 이유(실태조사) : 자연환경(33.1%), 농업·농촌의 비전과 미래(11.5%)

○ 도시농업·주말농장 확산, 귀농·귀촌 관련 언론·방송노출 확대, 귀농귀촌 성공사례 증가 등 사회적 관심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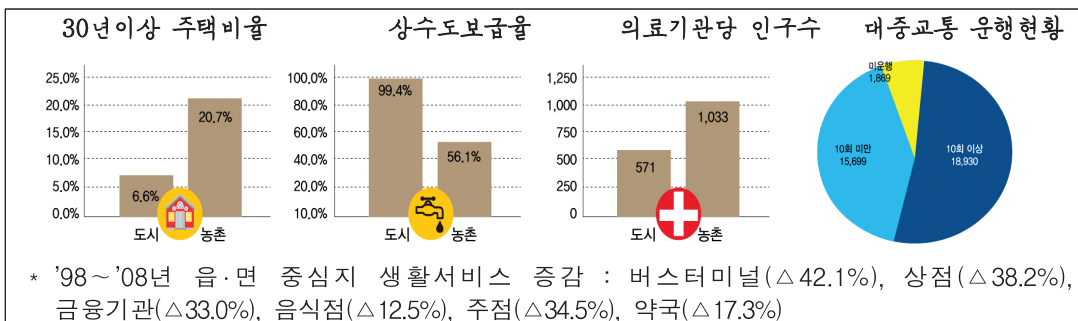
< 귀농 관련 언론 보도 건수 >

연도	(단위: 건)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전국 종합일간지	239	419	403	413	626	631	720	889
지역 종합일간지	947	1,801	1,852	2,224	3,589	4,226	3,753	4,154
계	1,186	2,220	2,255	2,637	4,215	4,857	4,473	5,043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www.bigkinds.or.kr)

□ (위협 요인) 인구 감소·고령화로 인한 농촌지역 구매력 저하 등으로 농촌 주민 삶의 질 인프라 및 서비스 전달체계 미흡

○ 공공부문을 제외한 대부분 상업적 서비스 제공 사업체 수 감소 추세



○ 귀농 초기 농지·주택구입 등 기반 조성에 상당한 비용 소요

* 귀농 첫해 평균 경지면적('13 : 0.45ha) 확보에 소요되는 농지구입 비용은 경기 3억 7,986만원, 충북 7,049만원, 경북 5,794만원

나 귀농귀촌 전망

◆ 최근 5년간 귀농·귀촌 추세(연평균 2.9%증가), 베이비 부머세대 은퇴 등을 감안시 향후 5년간 귀농·귀촌 인구는 증가세 유지 전망

○ '21년 귀농가구는 '15년보다 17.2% 증가된 약 1만 4,000가구로 추정(KREI)

□ (구조적 요인) 국내외 경제의 저성장 기조,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 가속화, 기대 수명 연장 등 고려시 귀농·귀촌 증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 향후 5년간 은퇴 연령(55~65)인구는 18.5% 증가 예상(연평균 3.7%)

* 은퇴 연령층(55~65세) 인구 추계(통계청) : ('16년)744만명 → ('21년)882만명

□ (미래 농업 전망) 스마트 팜, 6차 산업화, 농촌관광 등 농업 분야의 새로운 성장 가능성

○ 젊은 층의 농업에 대한 인식 변화,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증가

○ 짐 로저스 : “농업은 향후 가장 유망하고 잠재력 뛰어난 산업”

○ 6차산업 경영체 인력 수요 : ('13) 369천명 → ('20) 562 → ('25) 725

○ 국내외 농촌 관광객 : ('13) 829만명 → ('15) 870 → ('16) 1,000

○ 협동조합·사회적기업 증가 등 농업분야 인력수요 확산 추세

< 농촌 지역의 자생조직 설립 추이 >

(단위 : 개)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사회적 기업	30	12	40	22	31	66	82
협동조합	-	-	-	-	9	557	594

(출처 : 「농촌지역의 사회적 경제 실태와 활성화 방안」 2015. KREI)

□ (소득 요인) 40세 미만 청년층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보다 높아 농촌을 기회의 장(場)으로 생각하는 젊은 층 증가

○ 다만, 40세 이상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에 비해 낮은 현실은 장년층 이상의 귀농·귀촌 선택에 애로요인

(단위 : 천원, 2015년 기준)

구분	~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농가소득	95,405	50,043	60,703	40,133	24,368
도시근로자 평균	53,182	62,560	66,207	42,065	

* 평균소득 : 농가 37,215천원, 도시근로자 57,800천원(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

귀농·귀촌 실태 및 시사점

가 귀농·귀촌 인구 동향

□ 도시-농촌 인구이동 패턴 변화

○ '07년 이후 농촌 인구 순유입세로 전환, 순유입 규모 점증

* '13년부터는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농촌 인구 순유입 발생

< 도시와 농촌 사이의 인구이동 추이 >

(단위: 명)

연도	농촌(군)→도시(A)	도시→농촌(군)(B)	농촌(군 지역)으로의 인구 순유입(B-A)			
			계	수도권	지방대도시	중소도시
2006	458,524	442,086	△16,438	△12,041	△831	△3,566
2007	462,431	472,048	9,617	1,967	9,108	△1,458
2015	333,773	375,073	41,300	21,589	19,334	377

(출처 : 주민등록인구이동통계. 통계청)

□ 최근 5년간 매년 1.1만 가구 수준이 귀농, 약 30만 가구가 귀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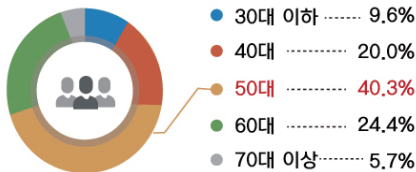
○ 귀농 가구주는 50대(40.3%), 60대(24.4%), 40대(20.0%) 순('15 기준)

* 50대 귀농 가구주 비율 : ('11) 37.4% → ('15) 40.3% (2.9%p ↑)

○ 40세 미만 청년 귀농은 연 1,150가구로 40세 미만 전체 농가의 9.0% 수준이 매년 유입되어 청년 농가 증가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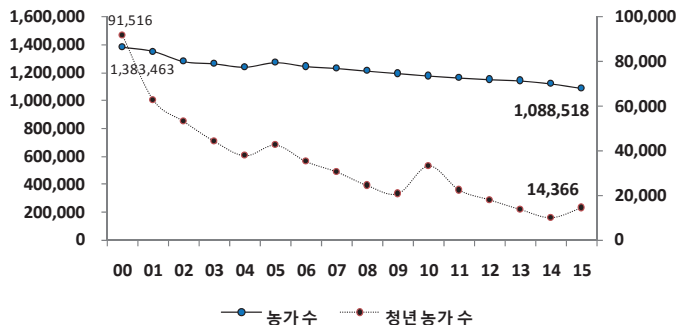
* 40세미만 귀농/농가 : ('13)1,164/13,586가구→('14)1,110/9,947→('15)1,150/14,366

< 귀농가구주 연령별 구성비 >



* 2015년 귀농귀촌 통계

< 농가 및 청년 농가수 감소 추세 >



☞ 농업 후계인력 확보를 위해 청년층 귀농·귀촌 촉진 정책 절실

나 귀농·귀촌 정착 실태

1 귀농·귀촌 유형

- 귀농은 농촌출신이 도시 은퇴 후 연고지로 이동하는 U턴형이, 귀촌은 농촌출신이 은퇴 후 비연고지로 이주하는 J턴형이 대세

	U턴	J턴	I턴
귀농	41.4%	26.8%	25.0%
귀촌	28.0%	31.3%	30.5%

- 귀농·귀촌 전 직업유형은 자영업, 사무직, 생산·기능직, 전문직, 판매서비스 직 등 농업과 무관한 다양한 유형의 직업경력
 - * 귀농 : 자영업(31.1%), 사무직(20.7%), 생산·기능직(10%), 관리자(7.9%), 전문직(7.5%)
 - * 귀촌 : 자영업(27.3%), 사무직(16.9%), 생산·기능직(8.6%), 판매·서비스(7.6%), 전문직(6.5%)
- 영농활동 수행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영농기술/경험부족(36.2%)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영농기술 교육 강화

2 귀농·귀촌 가구의 소득

- 귀농 5년차까지 가구 평균 소득은 2,645만 원, 2천만 원 미만 비율 45.9%로 귀농 가구의 초기 경영 기반 취약
 - * 귀농가구 평균 소득은 평균 농가소득 3,722만원의 71.1% 수준
- 농촌 이주 직후 가구 총소득의 급격한 하락, 3년차 이후 안정화 경향

< 귀농·귀촌 가구의 평균 소득 변화 >

(단위: 만 원)

구 분		귀농 직전 연도	이주 첫째	이주 2년차 (15년이주)	이주 3년차 (14년이주)	이주 4년차 (13년이주)	이주 5년차 (12년이주)
귀 농 가 구	농가소득	4,574	1,781(61.1% ↓)	1,984	3,071	3,145	3,242
	농업소득	-	600	644	1,523	1,666	1,853
	농외소득	-	773	965	693	959	960
귀촌 가구		4,108	2,496(39.2% ↓)	2,585	2,976	2,988	-

(출처 : 한국갤럽(2016), 『2016년 귀농귀촌 실태 조사』)

☞ 이주 초기 소득 확보를 위해 충분한 사전교육 등 준비지원강화 필요

③ 주거 형태

○ 귀농 초기 안정적인 주거 확보 어려움으로 임차와 임시거주 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

* 귀농 초기 주거 형태 : 자가 64.8%, 임차 22.2%, 임시거주 4.0%, 마을 빈집 3.8% 등

** 정착자금 주요 용처 : 귀농가구(농지 40.3%, 주택마련 34.5%), 귀촌가구(주택마련 68.8%)

👁️ 이주 초기 주거 부담 해소 및 다양한 형태의 주거 지원 필요

④ 귀농가구의 농업 창업 현황

○ (농지) 귀농가구 평균 농지면적은 0.78ha(소유 0.48, 임차 0.30)

* (귀농 2년차) 0.60ha → (3년차) 0.72ha → (4년차) 1.18ha로 점차 증가 추세

○ (투자규모) 농지·가축·시설 등의 초기 투자에 9,346만 원, 귀농 1년 이후 추가 투자에 2,727만 원을 지출(총 1.2억원 수준)

* 귀농가구 중 정책 자금 수혜자 비율은 보조금 18.4%, 융자금 19.1% (귀농 5년 이내)

< 농지·시설 투자규모 >

(단위 :만 원)

구 분	초기 투자(귀농 후 1년 이내)	추가 투자
농지/가축에 대한 투자액	6,523	1,282
시설 투자액	2,823	1,445
합계	9,346	2,727

(출처: 한국갤럽(2016), 『2016년 귀농귀촌 실태 조사』)

○ (영농 활동) 귀촌 가구 중 29.1%가 4년 이내 농업에 종사(농업 경영체등록 20.1%)

* 귀촌가구 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시작 시기는 1년 이내 83.7%, 2년 이내 97.9%

👁️ 귀농창업 자금 지원 확대, 귀촌인의 농업전환 지원 강화

⑤ 귀농·귀촌 가구의 농외 경제활동

○ 농산물 가공, 임금 노동, 자영업 등 농외 경제활동을 하는 귀농가구 비율은 45.3%, 시간이 지나면서 농외 경제활동 참여율 상승

- 농외 경제활동 이유는 '농업소득 부족' 72.7%, 재능 활용(12.8%), 사회생활 참여(4.8%) 순

- 39세 이하 귀농 가구의 농외경제활동 비율은 81.8%로, 젊은 귀농층의 6차 산업 등 참여 활발

* 농외 경제활동 : 농산물·가공식품 판매(11.4%), 자영업(9.3%), 일반 직장 취업(8.4%) 순

** 농외 경제활동율 : 귀농 2년차 42.5% → 3년차 44.1% → 4년차 45.7% → 5년차 48.9%

○ 귀촌가구 중 경제활동 참여 비율은 61.9%, 농사(29.1%), 자영업(15.1%), 일반 직장 정규직 취업(13.3%), 임시직(6.6%) 순

* 귀촌가구의 경제활동 수행시 어려움은 지식·기술 부족(24.9%), 정보 부족(16.2%), 지역내 인프라 부족(13.6%), 자본금 부족(11.1%) 순

☞ 농업 창업 지원 이외에 6차산업 등 소득원 연계 정책 강화

⑥ 지역사회 활동

○ 귀농가구는 '마을 회의·행사', '귀농·귀촌인 모임' 등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나, 귀촌가구는 상대적으로 소극적

* 귀농가구 지역 모임 참여 비율은 마을회의·행사 56.7%, 귀농·귀촌인 모임 40.5%인 반면, 귀촌가구는 '마을 회의나 행사(34.8%)'외에는 소극적

○ 지역민과의 주요 갈등 원인은 문화(17.1%), 선입견과 텃세(13.1%) 순

☞ 지역민과의 화합·융화를 위해 다양한 소그룹 형태 모임, 지역주민 대상 교육 강화

⑦ 기타 정책 지원

○ '정보 취득 어려움', '복잡한 지원 자격 및 절차', '실효성 부족'을 귀농·귀촌 정책의 문제점으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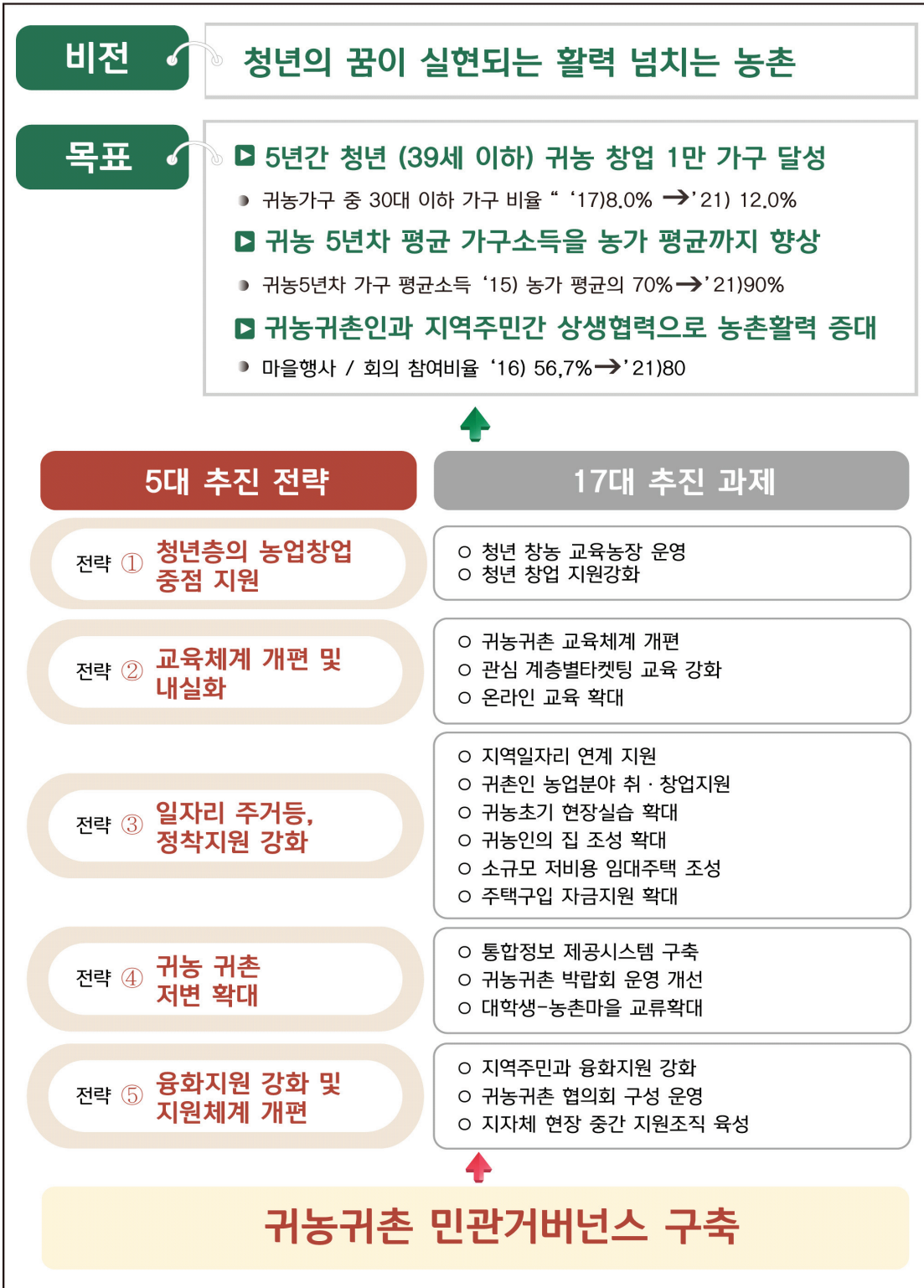
* 정보 취득 경로 : 가족 또는 지인(54.6%), TV·인터넷(36.7%), 귀농·귀촌 교육(15.6%) 순

☞ 수요자 입장에서 종합적인 ONE-STOP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III

비전과 목표

Ⅲ. 비전과 목표



IV

세부 추진계획

IV. 세부 추진계획

1

청년층의 농업 창업 중점 지원

〈 추진 방향 〉

- ◆ 현장 밀착형 집중교육과 실습비 지원으로 청년 창업농을 중점 육성
 - 6차 산업과 연계한 청년 창농 인큐베이팅 교육시스템 도입

1-1

청년 창업농 육성 지원

- 신규 창농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현장 밀착형 기술·경영 교육을 통해 창농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교육시스템 도입
 - * 영농 어려움(실태조사) : 영농기술/경험 부족 55.3%, 시설·자금부족 40.1%
- 지역 선도농가, 농업마이스터, 신지식인, 우수법인 등 현장 실습 교육이 가능한 곳을 '청년 창농 교육농장'으로 지정·운영
 - 2018년부터 도별 10개소(총 90개소)를 목표로 연차적으로 확대
 - * 연차별 운영 계획(누계) : ('18) 15개소 → ('19) 30 → ('20) 60 → ('21) 90
- 졸업 후 바로 창농이 가능하도록 귀농 예정지역 교육농장에서 1~2년간 머물면서 전문 영농기술, 유통·가공, 지역민과의 교류 등 종합 교육
 - 도제식 교육이 가능 하도록 교육농장 당 학생수는 5명 이내에서 운영
- 교육농장 졸업 후 창업시 창업자금 우선 지원
 - 귀농창업자금 신청시 청년층 우선 지원
 - * 융자금리 인하(2% → 1%) 및 농신보 우대보증 한도 상향조정(1억원 → 2억원)
 - **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세부 시행방안 마련

(사례 : 일본의 청년 신규취농 급부금 제도)

- ▶ 청년 취농자에게 유형별로 최장 7년 동안 보조금(연간 150만 엔) 지급
 - * 준비형 : 농업대학·선진농가·농업법인 등에서 연수시 최장 2년간 보조금 지급
 - * 경영개시형 : 독립적 영농 실시 농가에 최장 5년간 지급

1-2 6차 산업 창업 지원

□ (교육 강화) 귀농·귀촌인 대상 6차 산업 교육과정 신설

* 귀농·귀촌인 6차산업 인지도('15. 교육생 설문조사) : 알고 있음 37.8%, 들어본 적 있음(31.4), 모름 3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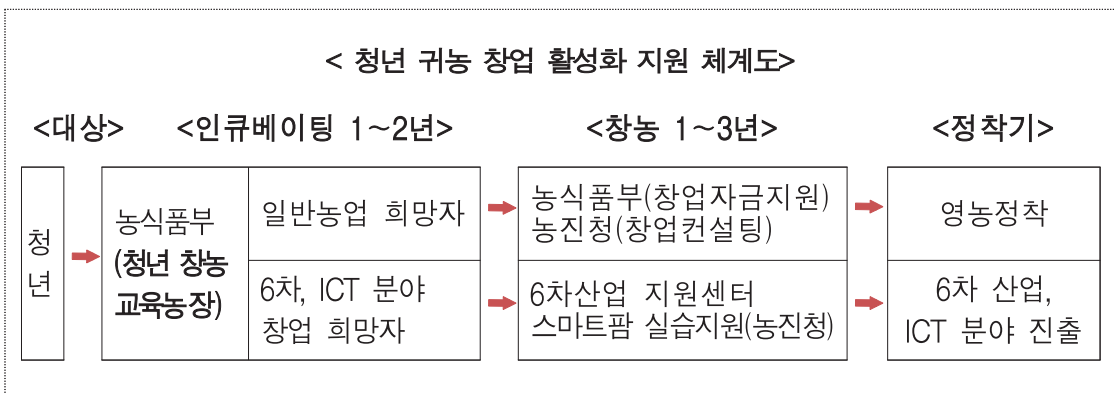
- 농촌체험관광, 농산물가공, 홍보마케팅분야 교육 프로그램 개발, 6차 산업 법인과 연계한 취업교육과정 개설 등
- 6차 산업화 지구(16개소) 내 귀농창업 아카데미 개설로 지역단위 6차 산업 발전의 핵심주체로 육성

□ (창업보육) 지역별 6차산업 지원센터(10개소), 귀농귀촌지원센터 간 협업체계 구축으로 정보·경영·기술 등 체계적·종합적 지원

- 지역별 6차산업 관련 정보제공, 지원 정책 안내

* 6차산업 경영체는 약 7,400개소, 인증사업자(1,020개소) 기준 평균매출액은 약 9.3억원, 전체 경영체 중 27.4%가 도시에서 귀농한 것으로 조사('15년)

- 농산물종합가공센터(44개소)를 통한 창업코칭·기술 교육, 안테나숍, 6차산업 전용판매관(네이버, 하나로마트 등)을 통한 판로 지원
- 경영·회계·법률·마케팅 등 현장 컨설팅 지원



2

교육 체계 개편 및 내실화

〈 추진 방향 〉

◆ 귀농·귀촌 유형별·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로 개편하고 교육 품질 제고

□ 분야별·과정별 교육 모델 개발을 통해 교육프로그램을 표준화

* 교육기관 분류, 표준교육프로그램 개발('17) → 교육기관 지정·운영('18)

○ 교육과목·유형·수준별로 교육기관을 전문화하고 유망 소득 작목 등 특화 과목 개설 확대

* 현재 종합센터 자체교육, 민간기관 위탁교육 4개 과정(귀농기초, 중급, 심화, 귀촌과정), 2030세대 취·창업과정, 군인·경찰, 대기업 등 대상 기획공모과정 운영 중

○ 강사요원 자격요건 및 심사를 강화하여 교육 품질 제고

□ 귀농 관심 계층별 타겟팅 교육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 청년층 : 전역 예정 군인, 직장인 야간과정 등

○ 중장년층 : 퇴직 예정 군인·경찰, 대기업 퇴직자 과정 등

○ 교육생 DB를 구축, 정착율 등 조사 및 정착 이후 발전단계별 교육 안내 등에 활용

□ 온라인 교육 확대 및 콘텐츠 강화

○ 접근성 제한 등 문제해결을 위해 온라인 교육을 확대하고 콘텐츠를 보강

- 현행 이론중심에서 영농기술, 성공·실패 사례 등 내용 보강

○ 오프라인 교육을 TED형 영상으로 제작, 교육의 실효성 제고

* TED(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 : 기술, 오락, 디자인 관련 강연회

□ 귀농귀촌 교육기관 평가 강화로 경쟁 체제 유도

○ 매년 교육기관 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정시 반영

* 농정원 귀농귀촌 교육기관 지정 현황 : ('15) 45개 기관 → ('16) 39

3

일자리·주거 등 안정적 정착 지원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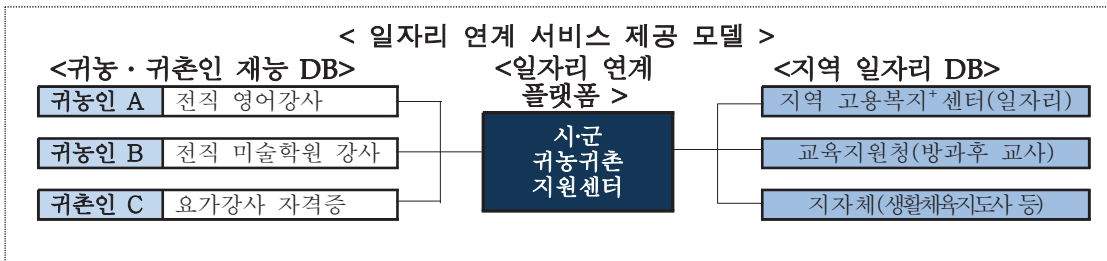
〈 추진 방향 〉

- ◆ 지역사회 일자리 연계 및 영농 실습교육 등 안정적 소득기반 지원
- ◆ 귀농 초기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주거 지원

3-1

지역 일자리 연계 지원

- 지역 귀농귀촌 지원센터에 일자리 연계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귀농·귀촌인의 재능과 경력을 활용한 농외 취업 지원
 - 농외 일자리 희망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인력 풀(pool) DB 구축, 지역 일자리와 연계 서비스 제공
 - 고용부 고용복지+센터, 교육부 방과후 학교 운영, 문체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사’, ‘문화이모작’ 사업, 여성가족부의 ‘새일센터’, 지자체의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 추진
- * 귀농·귀촌인 중 기술자격증(기능사, 기사, 기술사 등) 보유자 31.1%, 기타 자격증 보유자(교사, 보육사, 사회복지사, 조리사, 상담사 등) 21.5%



□ 청년 귀촌인의 농업 법인 취업 및 농산업 창업 지원

- 일정규모 이상 농업 법인 또는 6차산업 인증기업 등이 청년 채용시 연수비(월 80만원) 지원(최장 3년)
 - * 매출 100억 이상 농업회사법인 260개(통계청, 2014 농어업법인조사보고)
- 귀촌인 대상 스마트팜 현장교육 등 영농창업교육과정 개설·운영(농업기술센터)
- 중기청 청년 창업지원사업(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창업기업지원자금,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등) 연계 협업으로 농산업 분야 활용도 제고

- 귀농 초기 농업인과 선도농가를 연계하여 일정기간(3~5개월) 멘토링 및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선도농가 실습지원사업 확대**(농진청)
- 사업물량 : (현행) 500명/년 → (확대) 1,000명/년

3-2 주거지원 강화

- 귀농인의 집 조성 확대로 초기 주거 부담 완화
 - 농촌의 빈집 수리 또는 소형 주택을 신축하여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단기 임대(1년 이내)하는 귀농인의 집 확대
 - ('15까지) 70개소 → ('16) 140 → ('17) 210 → ('21) 500(누계)
 - * 귀농직후 주택 형태('15) : 자가(신축·구입) 55.5%, 임차(전세, 월세) 27.5, 귀농인의 집 8.0, 마을내 빈집 3.2, 기타 5.8
 - 지역개발 사업으로 건설된 시설 중 유휴시설 등을 '귀농인의 집'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귀농·귀촌 주택단지 시범사업 추진(LH)
 - 민간주도로 30~60호 규모의 단독 주택단지를 조성, 귀농·귀촌인에게 분양·임대('18)
 - 전국을 4대 권역으로 구분, 권역별 1~2개 지자체 공모·선정하여 추진
 - 임대의 경우 4년간 거주 후 주택 구매 허용
- 가족단위 이주 및 영농실습을 위한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는 사업 운영 성과 평가 후 확대 검토
 - * '16) 5개소(금산,제천,영주,홍천,구례) → '17) 8개소(고창,영천,함양)
- 귀농·귀촌인의 주택 신축·구입 자금 지원 한도를 현실에 맞게 단계적으로 확대 (5천만원 → 1억원)

— < 추진 방향 > —

◆ 귀농·귀촌 관련 정보제공을 수요자 중심으로 효율화하고, 청년층의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제고

- 귀농·귀촌 관련 각종 정보를 한곳에서 얻을 수 있도록 통합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 중앙정부 및 지자체 정책, 영농 전문가, 지역별 농지·주택 정보, 교육일정, 일자리, 지역특화 품목 등 각종 정보를 연계 종합 제공
 - 귀농·귀촌 과정별 필요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귀농·귀촌 네비게이션' 구축
 - 인공지능형 귀농·귀촌 상담 시스템을 도입, 네이버 지식IN 등 온라인 포털사이트와 연계하여 상담 및 컨설팅 기능 강화
- 귀농·귀촌 박람회는 일자리·취창업과 연계한 맞춤형 상담 기능을 강화하여 운영
 - 농업법인, 농촌 소재 기업의 구인·채용과 연계하고, 농촌 일자리 정보 제공
- 대학생 농촌교류단을 조직, 농촌마을과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농번기 일손 지원, 학습 및 취·창업 기회 제공
 - 마을과 연계된 창업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관심을 제고하고 미래 창업 유도

〈 추진 방향 〉

- ◆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의 상생협력으로 공동체 활력 창출
- ◆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정책 개발, 기관 간 협업 등 효율성 제고

[지역주민과의 융화 지원]

- 귀농·귀촌인 및 지역주민 대상 융화 교육 확대
 - 예비 귀농·귀촌인에 대한 농촌 생활·문화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리더(이장, 부녀회장 등) 및 지역주민 대상 교육과정도 개설
 -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새해영농실용화교육('16년 : 30만명) 과정에 귀농·귀촌 과목 포함
- 작목반 등 지역내 학습조직에 귀농인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동아리 모임' 활성화
 - 지역 귀농귀촌지원센터, 귀농·귀촌인과 마을 주민이 함께 하는 동아리 모임 및 행사(플리마켓 등) 지원
- 지역사회 발전 프로젝트를 지역민과 공동으로 구상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발전 공동사업 공모전' 도입
 - 우수 아이디어는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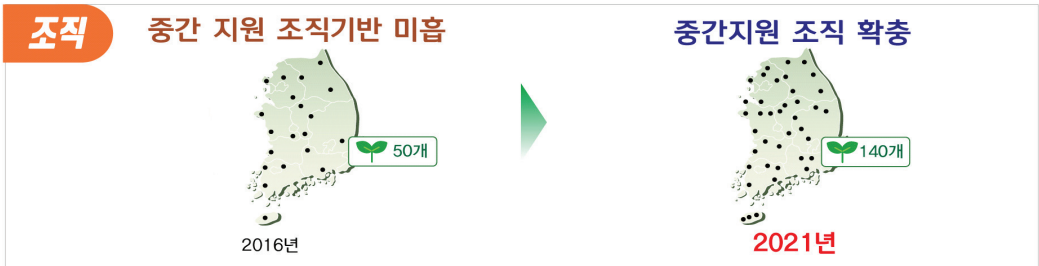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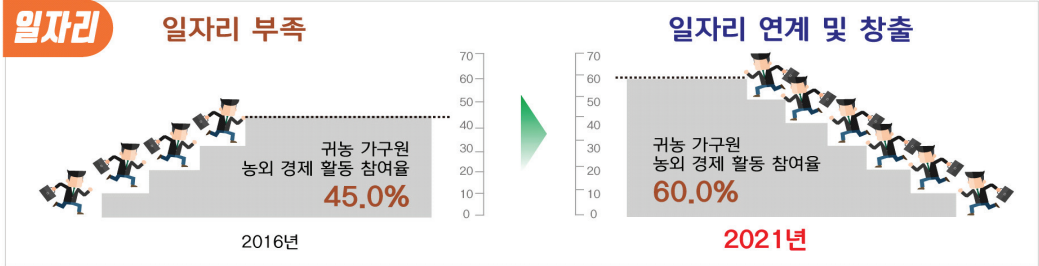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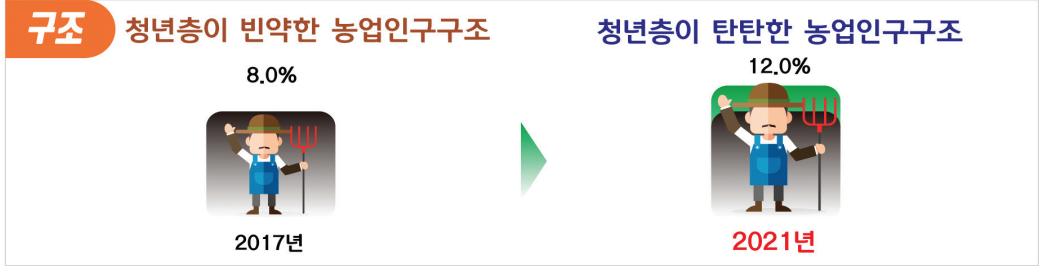
[귀농귀촌 지원체계 개편]

- 민·관이 참여하는 중앙 귀농·귀촌 협의회 구성·운영
 - 정부, 지자체, 귀농·귀촌인 단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장 애로 해소 및 정책 협의
- 귀농·귀촌종합센터 내에 지자체 사무소를 통합운영 하여 시너지 효과 제고
- 지자체(시·군) 중간지원조직 육성으로 현장지원기능 강화
 - 지역내 빈집·농지 등 알선, 생활상담 및 지역민과의 융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귀농귀촌지원센터' 연차적 확대(50 → 140개)
 - 지원센터 운영은 현지 귀농인 단체 등을 활용하고, 운영비 일부 지원

참고 1

종합계획 시행 후 변화된 모습

종합계획 시행 후 변화된 모습



참고 2

종합계획 목표 및 성과 지표

목표

5년간 청년(39세이하) 귀농 창업 1만 가구 육성
 - 지원 체계정비, 통합정보 제공, 창업·일자리·소득지원

전략	청년층 농업창업	교육체계 개편	안정적 정착지원	귀농귀촌 저변확대	융화지원 지원체계
주요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창업 교육 농장지정 ▶청년 창업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체계 개편 ▶관심 계층별 타겟팅 교육 ▶온라인 교육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리연계 ▶귀촌인 취창업 지원강화 ▶현장실습지원 ▶귀농인 집확대 ▶주택자금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정보제공 시스템구축 ▶박람회 운영 개선 ▶대학생 농촌 교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민과 융화지원 강화 ▶귀농 귀촌 협의회 구성 ▶중간지원 조직 육성

성과 지표	성과목표	2017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귀농유치를 통한 지역 활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30대 이하 청년가구 비율 -청년 창업 교육농장 조성 -청년 창업 교육농장 졸업생 정착율 		8.0%
		-	90개
		.	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체계 개편 및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농귀촌 교육 수료생 만족 -교육 수료생 정착율 		87.1점	93점
		9.1%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초기 안정적 정착지원 강화(소득,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외 경제활동 참여율 -귀농 5년차 가구 소득 (농가 평균 대비) -귀농인의 집 점유율 		45%	60%
		70%	90%
		(210개) 8.5%	(500개)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정보제공을 통한 귀농귀촌 저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농귀촌 준비 과정 만족도 		45.7%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융화지원 강화 및 지원체계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행사/회의 참여율 -귀농귀촌 정착율 		56.7%	80%
		90%	95%

참고 3**귀농·귀촌의 사회적 편익(KERI, 2012)**

□ 분석 개요

○ 분석 지역 및 대상 기간

- 귀농·귀촌으로 비용 편익이 발생하는 지역(서울 및 6대 광역시 도시민이 81개 군으로 이주할 경우 가정)을 대상으로 분석, 시계열 범위는 2000~2008년

○ 계측 구분

- (편익) 도시 교통혼잡비용 및 환경오염 감소, 농업생산성 증가
- (비용) 도시의 집적경제 감소, 귀농귀촌 교육비용, 보조금

□ 분석결과 : 귀농·귀촌 1인당 사회적 순편익은 연평균 169만원

☞ 2015년 귀농·귀촌인 486,638명을 기준으로 추정할 경우 사회적 순편익은 연간 8,224억 수준

- * 귀농·귀촌 예산 165억원, 창업자금 융자 지원 규모 1,500억을 비용으로 추계 하더라도 연간 6,600억원 수준의 사회적 편익 발생

< 귀농·귀촌 1인당 연간 사회적 순편익 >

(단위: 천 원)

	귀속지(농촌)	유출지(도시)	순효과
교통혼잡 및 환경오염처리비용 감소	△ 7.6	628.6	621.0
교통혼잡비용 감소		590.7	590.7
하수처리비용 감소	△ 7.6	13.6	6.0
대기오염물질 처리비용 감소		24.3	24.3
(황산화물)		(3.3)	(3.3)
(질소산화물)		(15.3)	(15.3)
(먼지)		(5.7)	(5.7)
지역총생산 증가	21,948.5	△20,879.6	1,068.9
(지역임금상승효과)	(256.4)	(△144.4)	(112.0)
합 계	21,940.9	△20,251.0	1,689.9

참고 4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의 근거 및 내용

□ (근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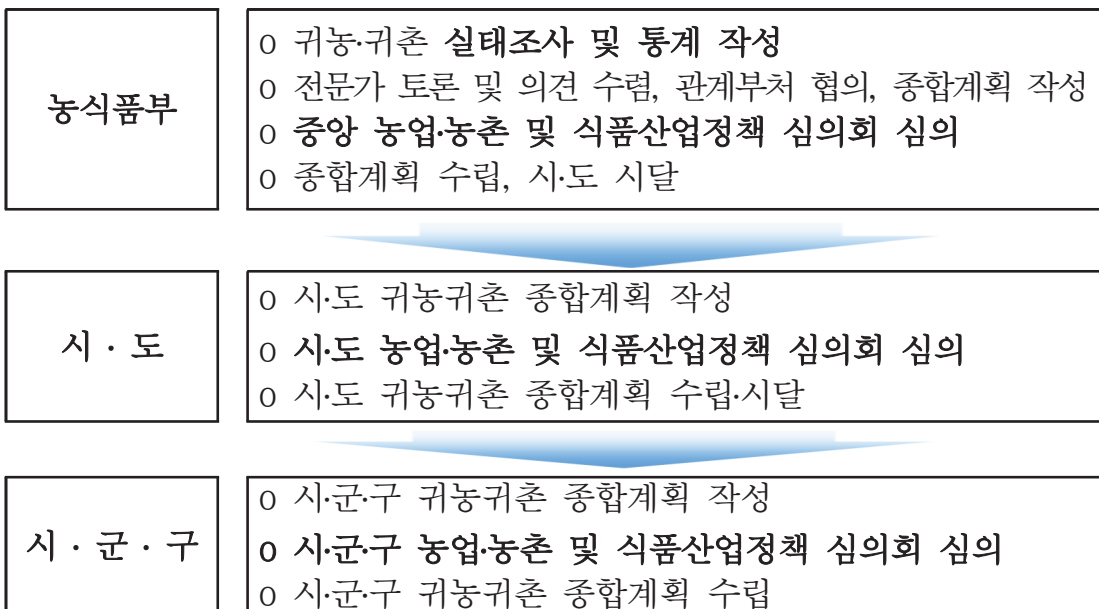
◆ (제5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및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내용)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및 농업 경영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반사항 포함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령 규정 사항 >

법률 제5조 제2항	시행령 제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귀촌 현황과 전망 ○ 기본방향과 목표 ○ 교육훈련과 전문인력 육성방안 ○ 주거, 생활 및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 홍보 및 정보화 촉진, 자원조달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상담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 관련 기관 간, 귀농인-지역주민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복지증진, 자녀교육, 의료 및 교통 등 농어촌생활에 필요한 사항

□ (절차) 귀농·귀촌지원 종합계획 수립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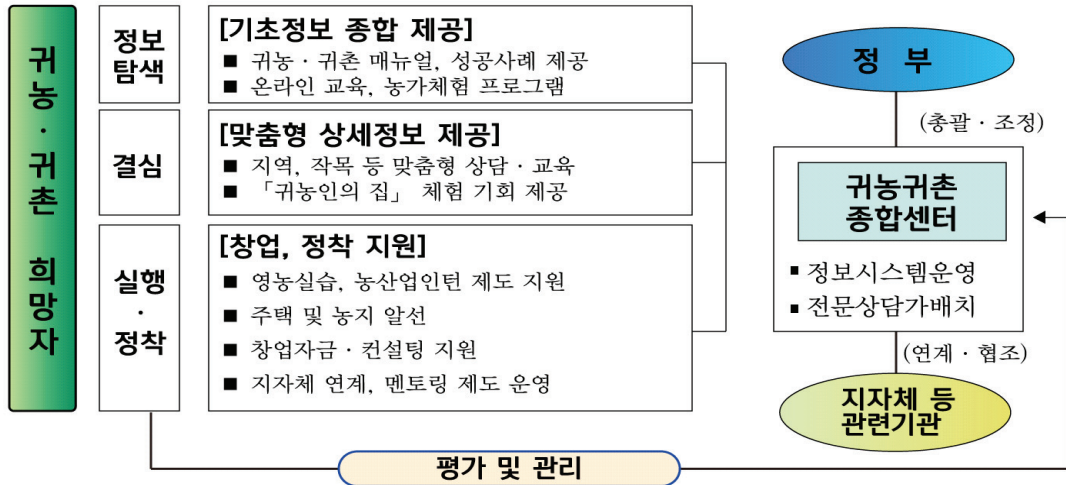
참고 5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수립 경과

- (실태조사)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귀농·귀촌 유형별 현황, 경영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15년 귀농·귀촌한 2만가구 중 각 1천 가구씩 표본추출 후 조사('16.4 ~ '16.10. 한국갤럽)
 - * 조사대상 범위·방법·조사표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실시방안 사전 연구('15.10~'16.1.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구용역)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수립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16.4 ~ '16.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귀농·귀촌 현황 및 정책성과 분석, 정책방향 설정, 정책과제 및 추진방안, 기관별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 등
- (전문가 포럼) 농발위원·학계·언론계·현장활동가·지자체 공무원·농업인단체 등 귀농·귀촌 전문가 50명으로 전문가 포럼 구성('16.4)
 - '16.4.13. 제1차 토론회를 시작으로 6차(월 1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 (관계부처 협의) 귀농·귀촌 지원을 위한 재정사업을 발굴하고 관계부처 재정 투융자 계획 등 의견 수렴('16.10)
- (공청회) 귀농·귀촌 전문가, 지자체 담당 공무원, 농업인 단체 등 각계 인사 200여명이 참여하는 워크숍 개최, 연구 결과 발표 및 의견 수렴('16.9.21~22)

[2009년 대책]

- 도시민 일자리 제공, 농식품 경쟁력 강화, 농촌 지역 주민 확보 등의 3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단계별 지원 정책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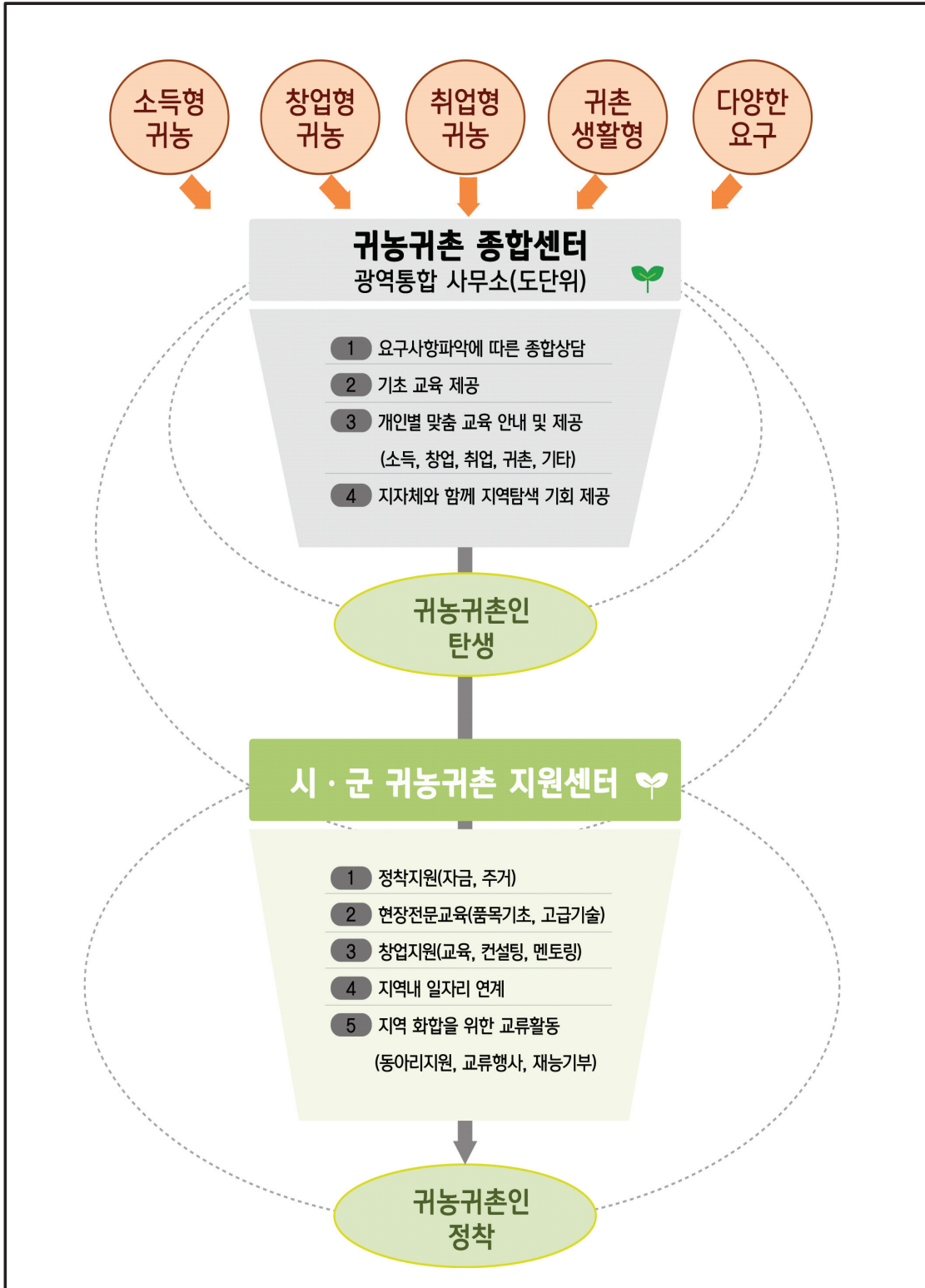
[2012년 대책]

- 귀농·귀촌 양적 확대를 정책 목표(귀농 2만호 달성)로 설정하고, 6개 분야 정책 과제 제시

과 제	세부과제
1. 정보전달 시스템 개선 (One-Stop 서비스)	○ '귀농·귀촌 종합센터' 확대·재편
2. 맞춤형 귀농·귀촌 교육 확대	○ 단계별(관심, 이주 등), 직업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 및 온라인 강의 추진
3. 농어촌 정착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 확대	○ 선도농가 실습 지원 사업 도입 ○ 영농·창업 및 주택마련 정책자금 융자 지원 ○ 농어촌주택 및 농지 구입에 따른 세제 감면
4. 지자체 도시민유치 활성화	○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 사업 확대 ○ 수도권 중심지에 '귀농·귀촌 종합상담센터' 설치
5. 사회적 붐 조성	○ 귀농·귀촌 박람회(페스티벌) 개최
6. 법적 지원 근거 등 제도 마련	○ 지자체의 귀농귀촌 활성화 제도 및 행정조직 정비 ○ 귀농·귀촌 관련 통계 정비 및 보완

참고 7

귀농·귀촌 통합서비스 체계도



부 록

2016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요약보고서



제 1 장. 조사 개요



1. 조사 배경 및 목적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시행됨(15. 7. 21.)에 따라 귀농·귀촌 실태조사가 의무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5년에 실태조사 실시 방안 마련을 위한 선행연구를 추진함

본 조사는 안정적인 귀농귀촌 정착 지원 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16년, 농식품부)의 기초자료로 귀농귀촌 현황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됨

2. 조사 설계

1) 법적근거

- 작성 근거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2) 조사연혁

- 2015년 : 실태조사 실시 방안 마련을 위한 선행연구 추진
- 2016년 : 제1회 조사 실시

3) 조사기간

- 조사기준 시점 : 현장 조사 진행 시점
 - 조사대상 여부, 동거 가구원 현황, 정책 만족도 및 개선 건의사항 등
- 조사대상 시점 : 귀농 직전 년도(2011~2014년, 귀농 전 1년), 귀농 및 귀촌 초기(2012~2015년, 귀농 후 1년 이내), 현재(2015년 7월~2016년 6월)
 - 거주 주택의 종류 및 점유 형태, 연간 농지 및 시설 투자액, 연간 소득, 재배품목별 재배 면적 및 생산량, 농업수입 및 경영비
- 조사실시기간 : 2016년 7월 18일 ~ 9월 13일

4) 조사주기

- 조사 주기 : 5년
- 작성 주기 : 5년

5) 조사대상

● 귀농인

- 동(洞)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2012~2015년에 농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읍·면(邑·面)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중 농업경영체 또는 농지원부에 등록한 사람

● 귀촌인

- 동(洞)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 2013~2015년에 농어촌 읍·면(邑·面)지역으로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 중 귀농인/귀어인을 제외한 사람. 단, 학생, 군 복무 중인 사람,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사람 제외

● 조사단위 : 가구

6) 조사항목

● 조사표 종류 : 귀농실태조사표, 귀촌실태조사표(2종)

● 귀농실태조사표 조사항목(77개) : 일반항목(67개), 특성항목(10개)

- 일반항목 : 귀농 현황(귀농 형태 및 귀농 이유 등), 주거(거주 지역 선택 이유 및 귀농 후 거주 주택과 현재 거주 주택의 종류, 점유 형태, 만족도 등), 생산활동 및 기반 시설(귀농 이후 농사 시작 시기 및 주 소득 작목, 귀농 초기 및 현재 연간 농지와 시설에 대한 투자액, 귀농귀촌 관련 정부 자금 용자 및 보조 여부 등), 경영활동(농업생산 관련 수행 활동, 연간 가구 소득, 재배품목별 생산비, 농업 소득 및 가구소득 전망, 월 평균 생활비 등), 지역사회 참여(지역주민과의 관계, 귀농인과 지역 주민과의 갈등 발생 이유 등), 귀농 준비(준비 기간 및 정착자금 규모, 귀농 준비 당시 가족들의 지지 정도, 귀농 관련 정보 입수 경로 등), 귀농만족도(전반 적 만족도 및 항목별 만족도 등), 교육/훈련(귀농귀촌교육 이수 여부, 이수 교육의 농촌생활 도움 정도 등), 정책(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귀농귀촌 정책 수혜 경험, 필요한 정책 등)

- 특성항목 : 일반현황(거주지 이주년도, 지역 등), 가구 현황(가구원 수, 가구원 현황 등)

● 귀촌실태조사표 조사항목(73개) : 일반항목(63개), 특성항목(10개)

- 일반항목 : 귀촌 현황(귀촌 형태 및 귀촌 이유 등), 주거(거주 지역 선택 이유 및 귀촌 후 거주 주택과 현재 거주 주택의 종류, 점유 형태, 만족도 등), 경영활동(수행중인 경제활동, 창업활동 경험 및 어려움, 연간 가구 소득, 가구소득 전망, 월 평균 생활비 등), 생산활동 및 기반시설(농업 생산 종사 여부, 향후 농사 계획, 영농활동 수행의 어려움 등), 지역사회 참여(지역주민과의 관계, 귀농인과 지역 주민과의 갈등 발생 이유 등), 귀촌 준비(준비 기간 및 정착자금 규모, 귀촌 준비 당시 가족

들의 지지 정도, 귀촌 관련 정보 입수 경로 등), 귀촌만족도(전반적 만족도 및 항목별 만족도 등), 교육/훈련(귀농귀촌교육 이수 여부, 이수 교육의 농촌생활 도움 정도 등), 정책(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귀농귀촌 정책 수혜 경험, 필요한 정책 등)

- 특성항목 : 일반현황(거주지 이주년도, 지역 등), 가구 현황(가구원 수, 가구원 현황 등)

7) 조사방법

- 면접조사 : 조사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를 작성하는 면접자 기입 방식

3. 응답자 특성

1) 귀농인

구 분		가중치 적용 전		가중치 적용 후	
		사례수(명)	%	사례수(명)	%
전 체		(1,027)	100.0	(1,027)	100.0
첫 귀농년도	2012년도	(229)	22.3	(260)	25.3
	2013년도	(246)	24.0	(253)	24.6
	2014년도	(264)	25.7	(258)	25.1
	2015년도	(288)	28.0	(257)	25.0
가구주 연령대	30대 이하	(54)	5.3	(56)	5.5
	40대	(153)	14.9	(160)	15.5
	50대	(439)	42.7	(432)	42.0
	60대	(318)	31.0	(316)	30.8
	70대 이상	(63)	6.1	(64)	6.2
가구원 수	1명	(188)	18.3	(183)	17.9
	2명	(511)	49.8	(505)	49.1
	3명	(158)	15.4	(162)	15.7
	4명 이상	(170)	16.6	(177)	17.3
지역	경 기	(133)	13.0	(92)	9.0
	충 북	(90)	8.8	(86)	8.4
	충 남	(130)	12.7	(115)	11.2
	전 북	(108)	10.5	(116)	11.3
	전 남	(142)	13.8	(172)	16.7
	경 북	(148)	14.4	(202)	19.6
	경 남	(119)	11.6	(132)	12.9
	강 원	(109)	10.6	(85)	8.2
	제 주	(48)	4.7	(26)	2.6

2) 귀촌인

구 분		가중치 적용 전		가중치 적용 후	
		사례수(명)	%	사례수(명)	%
전 체		(1,006)	100.0	(1,006)	100.0
첫 귀촌년도	2013년도	(367)	36.5	(315)	31.3
	2014년도	(294)	29.2	(336)	33.4
	2015년도	(345)	34.3	(355)	35.3
가구주 연령대	30대 이하	(95)	9.4	(93)	9.2
	40대	(197)	19.6	(191)	19.0
	50대	(331)	32.9	(322)	32.1
	60대	(295)	29.3	(299)	29.7
	70대 이상	(88)	8.7	(100)	10.0
가구원 수	1명	(212)	21.1	(210)	20.9
	2명	(459)	45.6	(478)	47.5
	3명	(171)	17.0	(167)	16.6
	4명 이상	(164)	16.3	(151)	15.1
지역	경기	(174)	17.3	(282)	28.0
	충북	(102)	10.1	(71)	7.1
	충남	(148)	14.7	(124)	12.4
	전북	(87)	8.6	(58)	5.8
	전남	(144)	14.3	(111)	11.0
	경북	(112)	11.1	(128)	12.7
	경남	(102)	10.1	(132)	13.1
	강원	(100)	9.9	(78)	7.8
제주	(37)	3.7	(22)	2.2	



제 2 장. 조사 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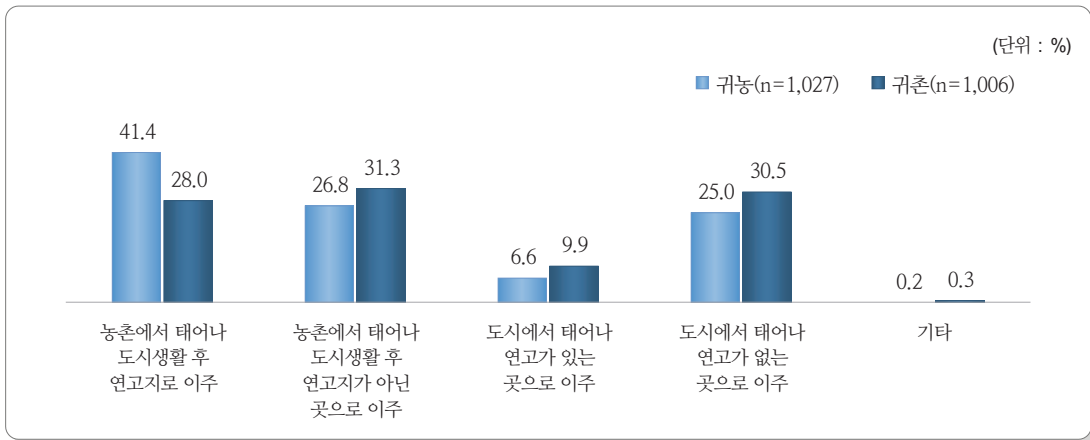
PART 1. 귀농/귀촌 형태

1. 귀농/귀촌 형태

귀농 가구의 주된 귀농형태로는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연고지로 이동’하는 U형이 41.4%로 가장 많은 반면, 귀촌 가구는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연고지가 아닌 곳으로 이주’한 J형이 31.3%로 가장 많았음

귀농 가구의 경우, U형에 이어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연고지가 아닌 곳으로 이주’하는 J형이 26.8%, ‘도시에서 태어나 연고가 없는 곳으로 이주’하는 I형은 25.0%로 조사되었으며 귀촌 가구의 경우 ‘도시에서 태어나 연고가 없는 곳으로 이주’하는 I형이 30.5%로 높게 나타나, 귀농에 비해 연고지에 정착하려는 경향은 약한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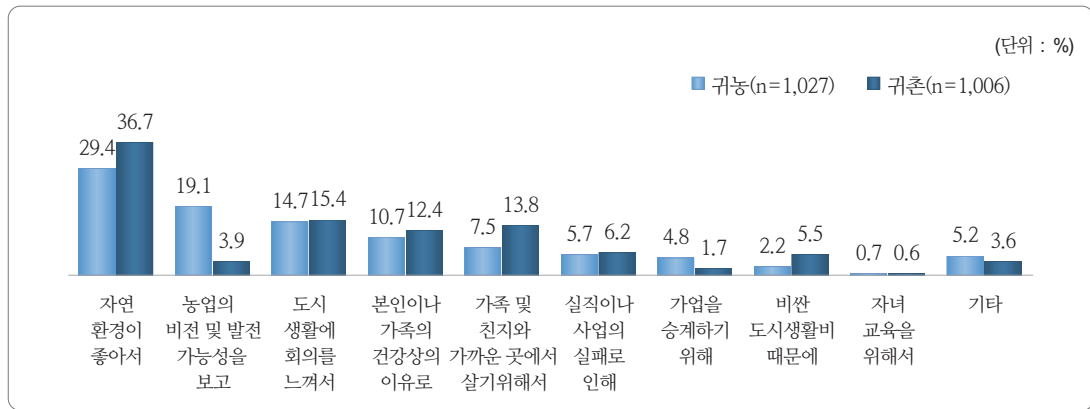
[그림 2-1] 귀농/귀촌 형태



2. 귀농/귀촌 이유

귀농과 귀촌 가구 모두 귀농/귀촌 이유로 ‘자연환경이 좋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귀농 가구의 경우 ‘농업의 가능성과 비전을 보고’ 귀농을 한 경우도 19.1%로 비교적 높은 응답을 차지함

[그림 2-2] 귀농/귀촌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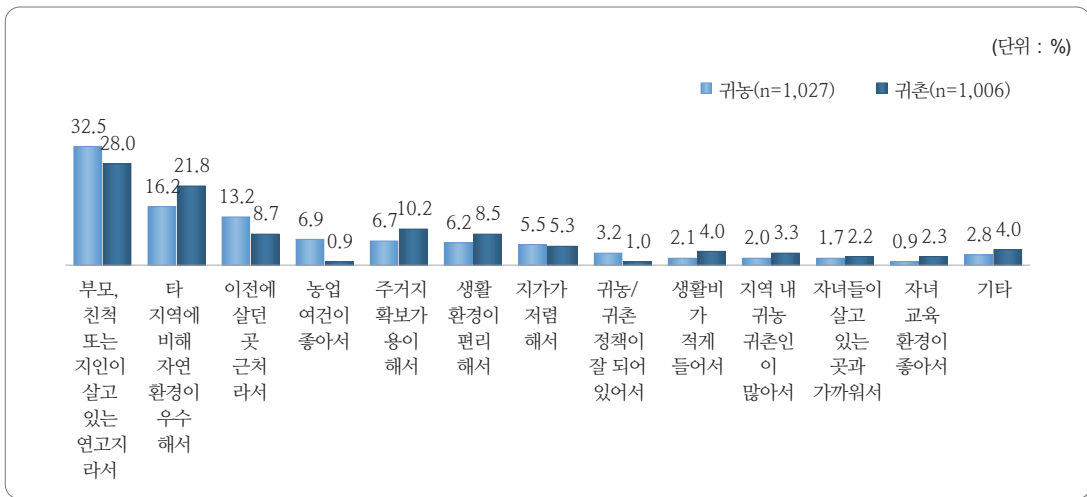


PART 2. 주거 현황

1. 주거 지역 선택 이유

현재 거주 지역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1순위 응답 기준으로 귀농 가구의 32.5%와 귀촌 가구의 28.0%가 ‘부모, 친척 또는 지인이 살고 있는 연고지라서’가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타 지역에 비해서 자연환경이 우수해서’, ‘이전에 살던 곳 근처라서’ 등의 응답이 높아 연고지 등 가구에 익숙한 지역적 요인과 자연환경의 우수함이 주된 거주 지역 선택 이유로 꼽혔으며, 귀촌 가구의 경우 ‘주거지 확보가 용이해서’(10.2%)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아 생활환경의 편리함 또한 귀촌 지역 선택 시 고려되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2-3] 현재 거주 지역 선택 이유(1순위)



[표 2-1] 현재 거주 지역 선택 이유(1+2순위)

(단위 : %)

구분	부모, 친척 또는 지인이 살고 있는 연고지라서	타 지역에 비해서 자연 환경이 우수 해서	이전에 살던 곳 근처 라서	농업 여건이 좋아서	주거지 확보가 용이 해서	생활 환경이 편리 해서	지가가 저렴 해서	귀농/ 귀촌 정책이 잘 되어 있어서	생활비 가 적게 들어서	지역 내 귀농 귀촌인 이 많아서	자녀들 이 살고 있는 곳과 가까 워서	자녀 교육 환경이 좋아서	기타
귀농	40.8	29.0	20.6	17.6	17.7	12.9	13.7	5.7	5.8	5.2	3.2	2.3	4.0
귀촌	34.2	37.1	13.0	2.4	22.7	16.3	13.5	3.0	12.0	9.2	3.3	4.2	6.1

2. 거주 주택

귀농귀촌 후 처음 거주한 주택은 ‘농가주택 등 단독주택’인 경우가 귀농 가구의 79.3%, 귀촌 가구의 74.2%로 높았으며, 귀농 가구의 64.8%와 귀촌 가구의 69.7% 정도가 ‘자가(신축이나 구입)’의 형태로 주택을 점유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농가주택 등 단독주택’의 비율은 귀농 가구가 88.2%, 귀촌 가구가 74.7%로 귀농귀촌 초기보다 소폭 증가하였으며, ‘자가(신축이나 구입)’인 경우도 각각 75.5%와 73.8%로 자가 형태의 점유 비중이 귀농귀촌 초기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조사됨

[표 2-2] 거주 주택 종류

(단위 : %)

구분	귀농/귀촌 초기		현재	
	귀농(n=1,027)	귀촌(n=1,006)	귀농(n=1,027)	귀촌(n=1,006)
단독주택 (농가주택포함)	79.3	74.2	88.2	74.7
아파트	8.5	13.9	3.4	11.9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6.2	8.5	4.2	10.2
주거용 오피스텔	0.5	0.4	0.2	0.2
기타	5.5	3.1	4.0	2.9

[표 2-3] 거주 주택 점유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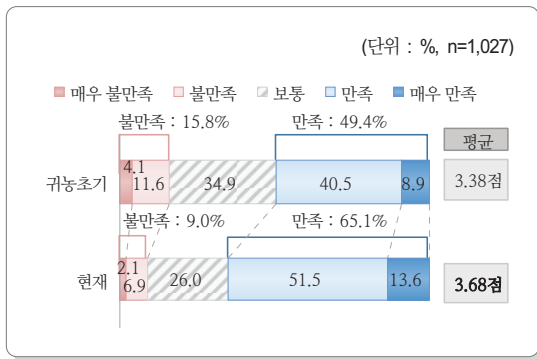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귀농/귀촌 초기		현재	
	귀농(n=1,027)	귀촌(n=1,006)	귀농(n=1,027)	귀촌(n=1,006)
자가 (신축이나구입)	64.8	69.7	75.5	73.8
임차 (전세, 월세)	22.2	25.4	16.0	21.9
임시거주 (귀농인의집등)	4.0	1.7	2.1	1.4
마을내빈집 (빈집정책활용)	3.8	1.2	2.5	1.0
기타	5.2	2.0	3.8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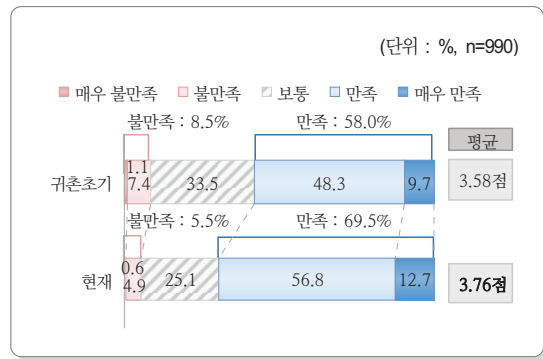
3. 거주 주택 만족도

귀농귀촌 초기에 거주했던 주택에 대해 귀농 가구의 49.4%, 귀촌 가구의 58.0%가 만족(매우 만족+만족)하였으며,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38점과 3.58점이었던 것에 반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귀농 가구 65.1%, 귀촌 가구 69.5%가 만족(매우 만족+만족), 만족도는 3.68점과 3.76점으로 귀농귀촌 초기에 비해 주거 만족도는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귀농 가구보다 귀촌 가구의 주택 만족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됨

[그림 2-4] 거주 주택 만족도(귀농)



[그림 2-5] 거주 주택 만족도(귀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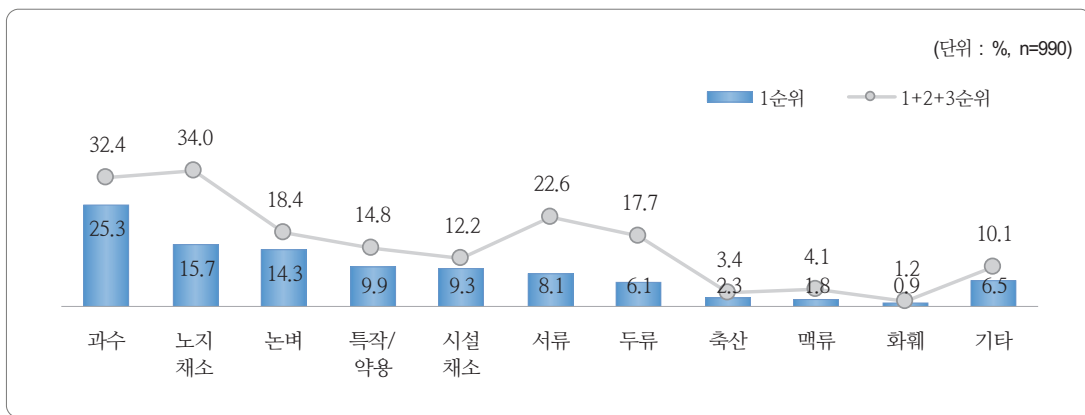


PART 3. 귀농귀촌인의 농업 활동

1. 주소득 작목

귀농 가구의 주소득 작목은 1순위 응답 기준으로 '과수'(25.3%), '노지채소'(15.7%), '논벼'(14.3%), '특용/약용작물'(9.9%) 등으로 조사되었으며, 1+2+3순위 응답 기준으로는 '노지채소'가 34.0%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과수'(32.4%), '서류'(22.6%)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6] 주소득 작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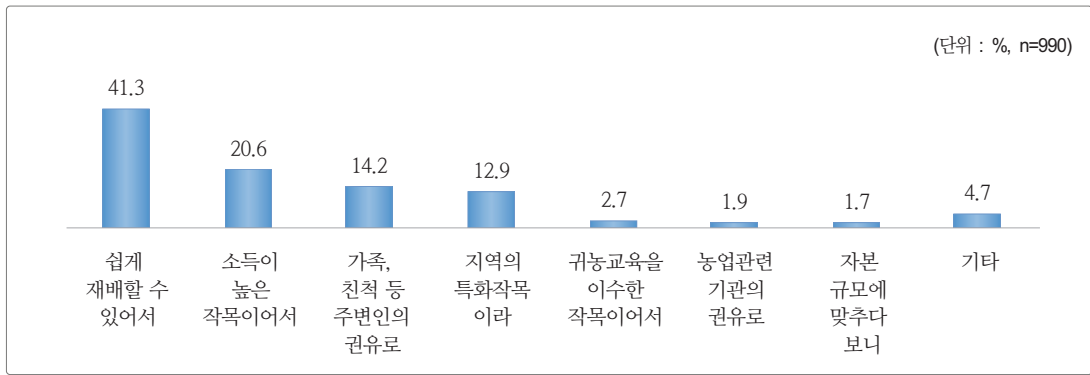


2. 주작목 선택 이유

주소득 작목을 선택한 이유로는 ‘쉽게 재배할 수 있어서’(41.3%)과 ‘소득이 높은 작목이어서’(20.6%)라는 응답이 많아 재배의 용이성과 높은 소득이 작목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가구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쉽게 재배할 수 있어서’ 응답이, 연령이 낮아질수록 ‘소득이 높은 작목이어서’ 응답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2-7] 주작목 선택 이유



[표 2-4] 주작목 선택 이유 - 가구주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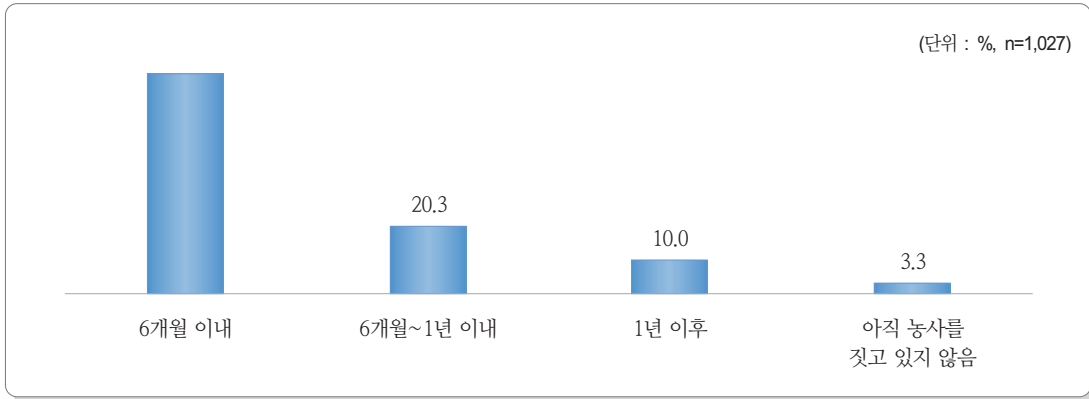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사례수)	쉽게 재배할 수 있어서	소득이 높은 작목이어서	가족, 친척 등 주변인의 권유로	지역의 특화작목 이라	귀농교육을 이수한 작목이어서	농업관련 기관의 권유로	자본 규모에 맞추다 보니	기타
가구주 연령	30대 이하 (55)	31.4	25.4	12.6	12.7	4.4	0.0	5.9	7.7
	40대 (153)	33.1	24.0	20.7	8.2	5.8	0.6	0.9	6.7
	50대 (416)	37.8	23.3	13.2	15.5	2.3	2.7	1.7	3.6
	60대 (304)	47.8	15.9	14.1	12.4	1.4	2.2	1.8	4.5
	70대 이상 (62)	62.4	13.0	7.8	9.8	2.3	0.0	0.0	4.7

3. 귀농 이후 농사 시작 시기

귀농 가구의 2/3 정도가 귀농 후 '6개월 이내'(66.4%)에 농사를 짓기 시작했으며, '아직 농사를 짓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약 3.3%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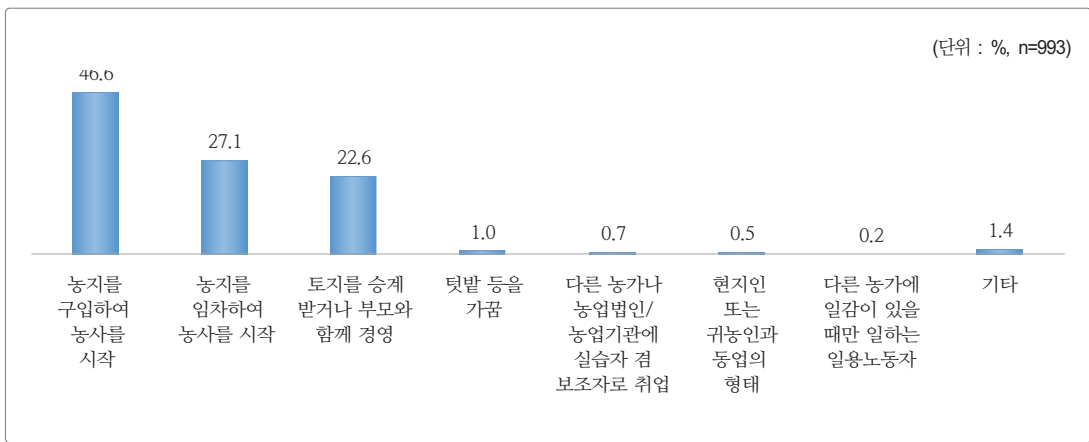
[그림 2-8] 귀농 이후 농사 시작 시기



4. 처음 농사 시작 형태

처음 농사를 시작한 형태로는 46.6%가 '농지를 구입하여 농사를 시작'했다고 응답함. 한편, 가구주 연령이 40대 이하인 경우, 50대 이상인 가구보다 '농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시작' 했다는 응답이 더 높았고, 30대 이하인 가구에서는 '토지를 승계 받거나 부모와 함께 경영'한 경우가 43.5%로 가장 높게 조사됨

[그림 2-9] 처음 농사 시작 형태



[표 2-5] 처음 농사 시작 형태 - 가구주 연령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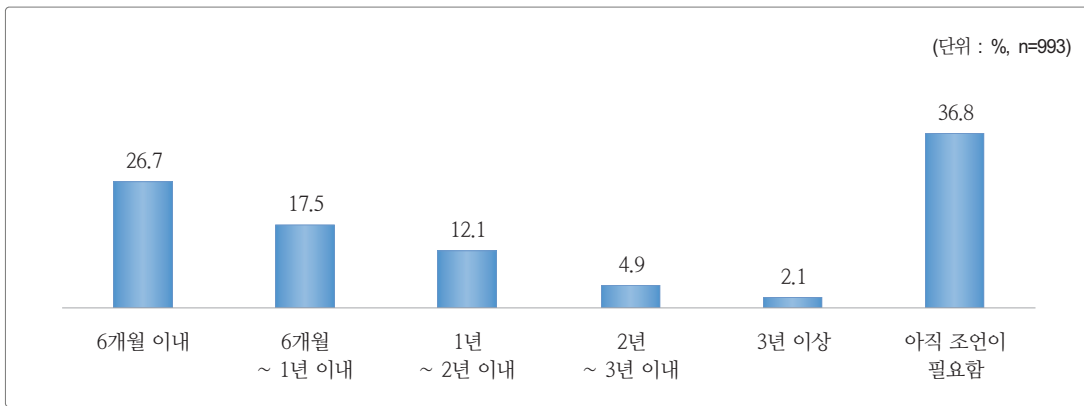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농지를 구입하여 농사를 시작	농지를 임차하여 농사를 시작	토지를 승계 받거나 부모와 함께 경영	텃밭 등을 가꿈	다른 농가나 농업법인/농업기관에 실습자 겸 보조자로 취업	현지인 또는 귀농인과 동업의 형태	다른 농가에 일감이 있을 때만 일하는 일용노동자	기타	
가구주 연령	30대 이하	(55)	21.2	31.2	43.5	0.0	1.8	0.0	0.0	2.3
	40대	(154)	35.9	37.3	22.1	0.9	0.4	1.5	0.0	1.8
	50대	(417)	47.6	29.9	20.0	0.9	0.6	0.4	0.4	0.2
	60대	(305)	54.8	20.5	20.0	1.2	0.8	0.3	0.0	2.4
	70대 이상	(62)	49.3	11.4	35.8	1.7	0.0	0.0	0.0	1.7

5. 다른 사람의 조언 없이 농사 짓기까지의 기간

귀농 가구에게 농사를 시작한 이후 다른 사람의 조언 없이 농사를 짓기까지의 소요기간에 대해 질문한 결과, 아직도 조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6.8%로 가장 많았으며, 26.7%는 6개월 이내로 응답함

한편, 가구주 연령이 30대 이하인 경우 '6개월 이내' 응답은 19.3%로 비교적 낮은 반면, 2년 이상 걸렸다는 응답이 12.1%로 높게 나타나 연령이 낮을수록 다른 사람의 조언 없이 농사 짓기까지의 기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었음

[그림 2-10] 다른 사람의 조언 없이 농사 짓기까지의 기간



[표 2-6] 다른 사람의 조언 없이 농사 짓기까지의 기간 - 가구주 연령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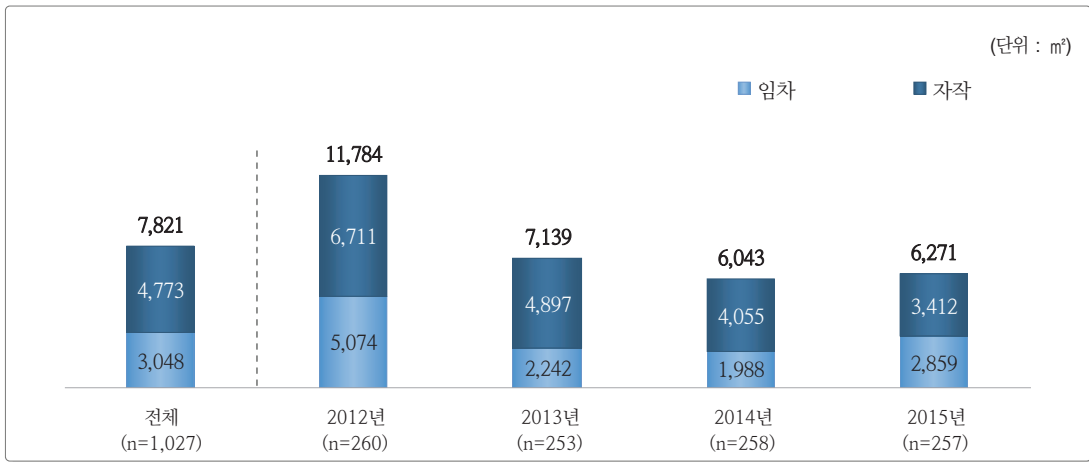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6개월 이내	6개월 ~ 1년 이내	1년 ~ 2년 이내	2년 ~ 3년 이내	3년 이상	아직조언이 필요함	
가구주 연령	30대 이하	(55)	19.3	20.1	7.6	6.1	6.0	40.9
	40대	(154)	23.6	17.2	10.3	3.0	2.9	43.1
	50대	(417)	25.0	18.3	13.2	5.3	1.9	36.3
	60대	(305)	29.4	17.2	12.1	5.1	1.5	34.7
	70대 이상	(62)	38.8	11.5	12.6	4.5	1.1	31.4

6. 농지 규모

귀농 가구가 경영하고 있는 논, 밭, 과수원의 규모를 합한 총 농지 규모 평균은 7,821㎡(임차 : 3,048㎡ + 자작 : 4,773㎡)로 집계되었음

농지 규모를 귀농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에 귀농한 가구는 평균 11,784㎡(임차 : 5,074㎡ + 자작 : 6,711㎡)로 가장 넓었으며, 2014년과 2015년에 귀농한 가구는 평균 6,000㎡ 내외로 귀농한 기간이 오래 될 수록 농지규모가 커지는 경향이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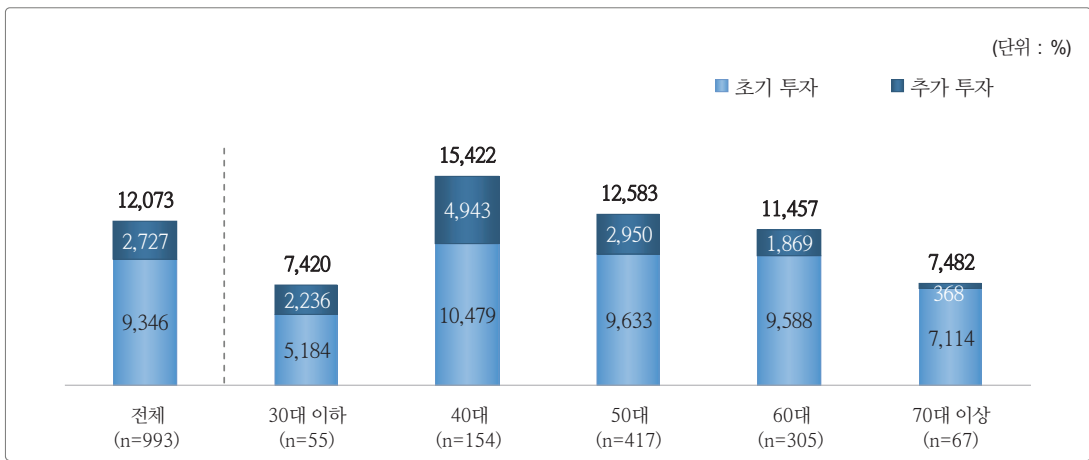
[그림 2-11] 농지(논+밭+과수원) 규모



7. 농지/가축/시설에 대한 투자

귀농 초기에 농지 및 가축, 시설에 투자한 총 투자액은 평균 12,073만원(초기 투자 : 9,346만원 + 추가 투자 : 2,727만원)으로 집계되었으며, 가구주 연령이 40대인 경우 총 투자금액이 15,422만원으로 가장 많은 반면, 30대 이하인 경우 총 투자금액이 7,420만원, 특히 초기 투자 금액이 5,184만원으로 가장 적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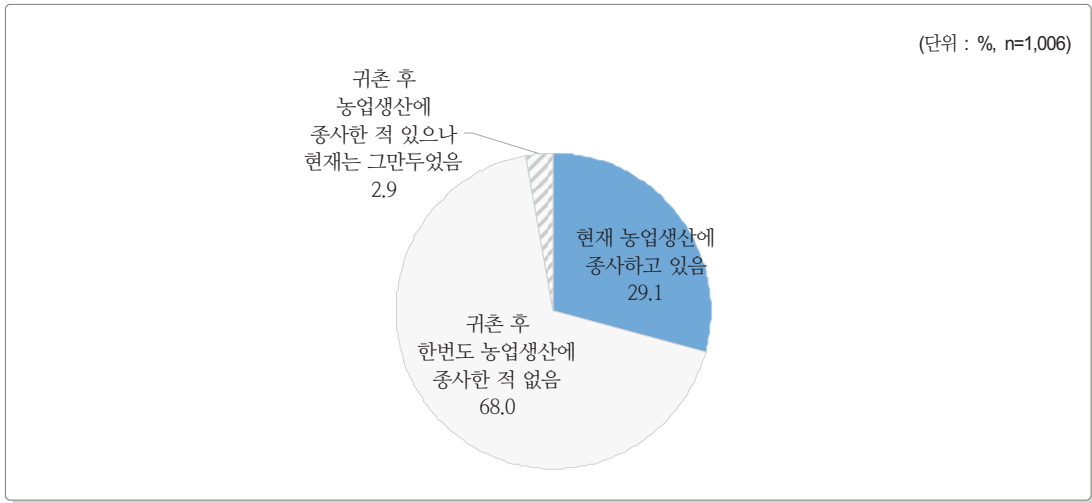
[그림 2-12] 농지/가축/시설에 대한 투자



8. 귀촌 후 농업생산 종사 여부

귀촌 가구의 29.1%가 현재 농업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9%는 귀촌 후 농업생산에 종사하다가 현재 그만둔 것으로 나타나 전체의 32.0%가 농업생산을 시도하는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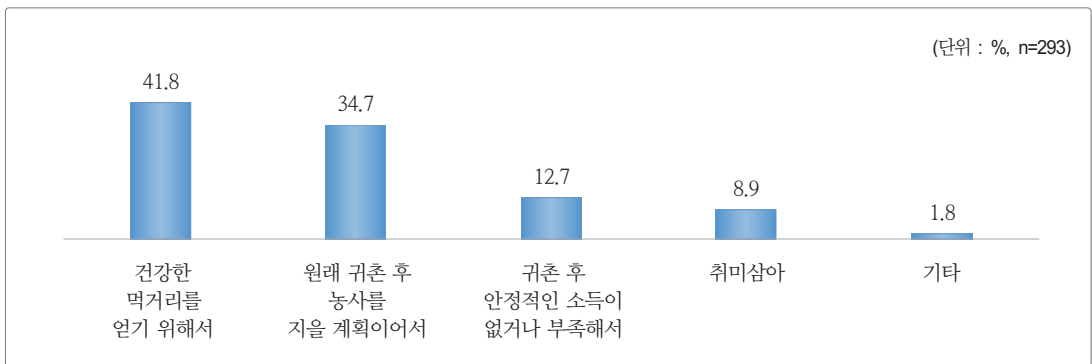
[그림 2-13] 귀촌 후 농업생산 종사 여부



9. 영농활동 수행 이유

귀촌 후 영농활동을 수행하게 된 이유는 '건강한 먹거리를 얻기 위해서'(41.8%), '원래 귀촌 후 농사를 지을 계획이어서'(34.7%), '귀촌 후 안정적인 소득이 없거나 부족해서'(12.7%) 등인 것으로 조사됨

[그림 2-14] 영농활동 수행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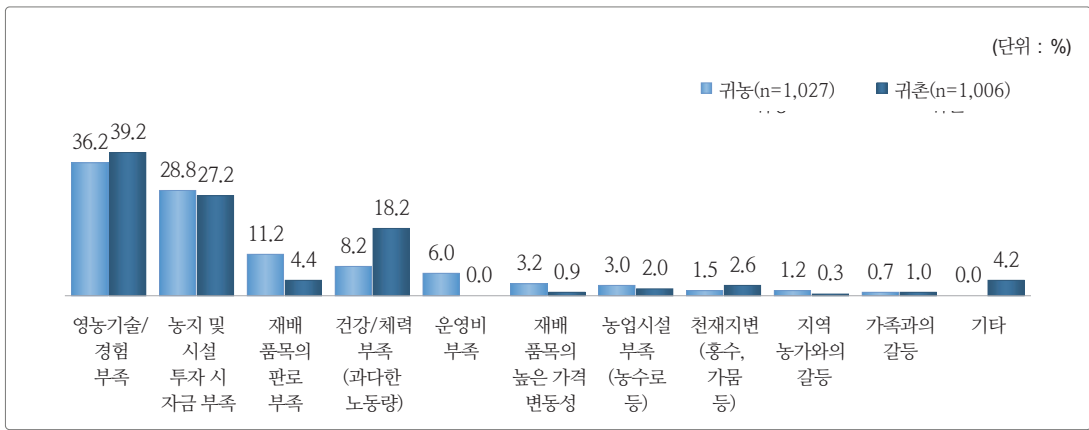


10. 영농활동 수행 시 어려움

영농활동 수행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귀농과 귀촌가구 모두 ‘영농기술/경험 부족’, ‘농지 및 시설 투자 시 자금 부족’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귀농 가구의 경우 ‘재배 품목의 판로 부족’(11.2%), 귀촌 가구의 경우 ‘건강/체력 부족’(18.2%)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한편 ‘농지 및 시설 투자시 자금 부족’이 영농활동 수행 시 가장 어렵다는 의견은 가구주 연령이 낮을 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으며, 특히 40대 귀농인은 43.1%로 특히 더 높았음

[그림 2-15] 영농활동 수행 시 어려움



[표 2-7] 영농활동 수행 시 어려움 - 가구주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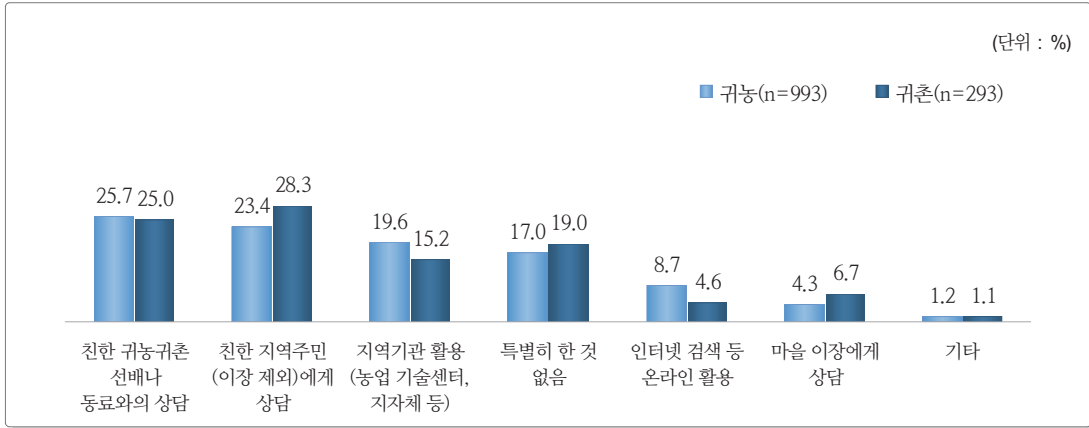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사례수	영농기술/경험 부족	농지 및 시설 투자 시 자금 부족	재배 품목의 판로 부족	건강/체력 부족 (과다한 노동량)	운영비 부족	재배 품목의 높은 가격 변동성	농업시설 부족 (농수로 등)	천재지변 (홍수, 가뭄 등)	지역 농가와의 갈등	가족과의 갈등	기타
귀농	30대 이하 (55)	33.4	33.2	9.2	5.9	11.5	6.8	0.0	0.0	0.0	0.0	0.0
	40대 (154)	23.8	43.1	14.6	9.2	3.4	2.2	0.6	1.0	2.0	0.0	0.0
	50대 (417)	35.2	31.0	10.5	4.6	5.9	4.3	4.3	1.8	1.4	1.0	0.0
	60대 (305)	44.5	21.0	11.7	9.4	6.0	1.6	2.4	1.5	1.0	1.0	0.0
	70대 이상 (62)	35.7	13.3	7.1	25.7	7.4	3.1	6.5	1.1	0.0	0.0	0.0
귀촌	30대 이하 (26)	22.5	44.3	0.0	23.8	0.0	0.0	0.0	4.9	0.0	4.5	0.0
	40대 (38)	46.1	32.0	6.4	4.4	0.0	0.0	4.8	3.1	0.0	3.3	0.0
	50대 (101)	38.8	26.9	7.9	13.5	0.0	0.7	0.6	4.5	0.9	0.6	5.6
	60대 (100)	45.8	22.8	2.0	19.5	0.0	2.0	2.8	0.7	0.0	0.0	4.4
	70대 이상 (29)	23.0	21.9	1.8	43.6	0.0	0.0	2.2	0.0	0.0	0.0	7.6

11. 영농활동 수행 시 어려움

영농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로 ‘친한 귀농귀촌 선배나 동료와 상담’하거나 ‘친한 지역주민과 상담’ 하는 등 주로 지인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으로 조사됨. ‘지역기관을 활용’하는 경우는 귀농 19.6%, 귀촌 15.2%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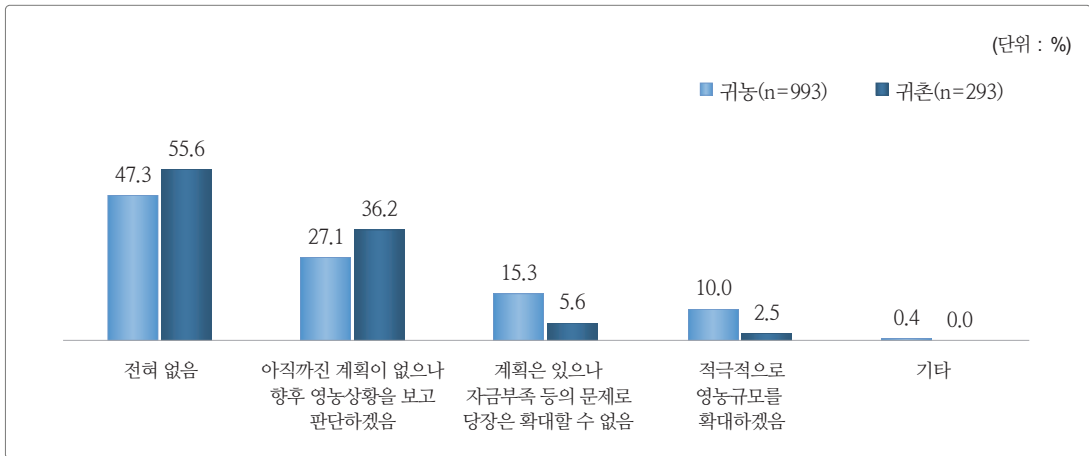
[그림 2-16] 영농활동 어려움 해소 방법



12. 영농 규모 확대 계획

향후 영농규모 확대 계획에 대해서는 ‘없다’는 의견이 귀농과 귀촌 모두 가장 높았고, ‘계획 없으나 향후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의견과 ‘계획은 있으나 자금 부족으로 확대 불가’ 의견이 40% 이상으로 부정적인 의견이 주를 이루었으며,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의견은 귀농 10.0%, 귀촌 2.5%에 불과하였음

[그림 2-17] 영농 규모 확대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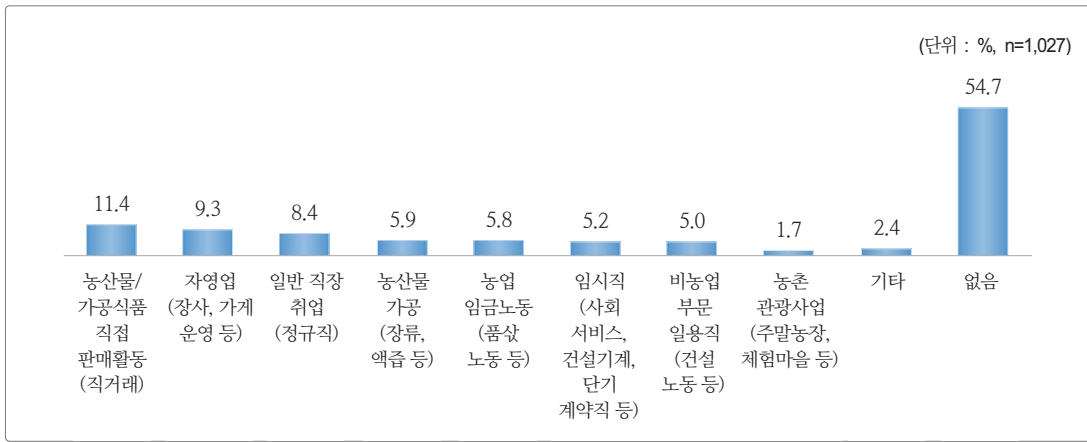


PART 4. 귀농가구의 농외 경제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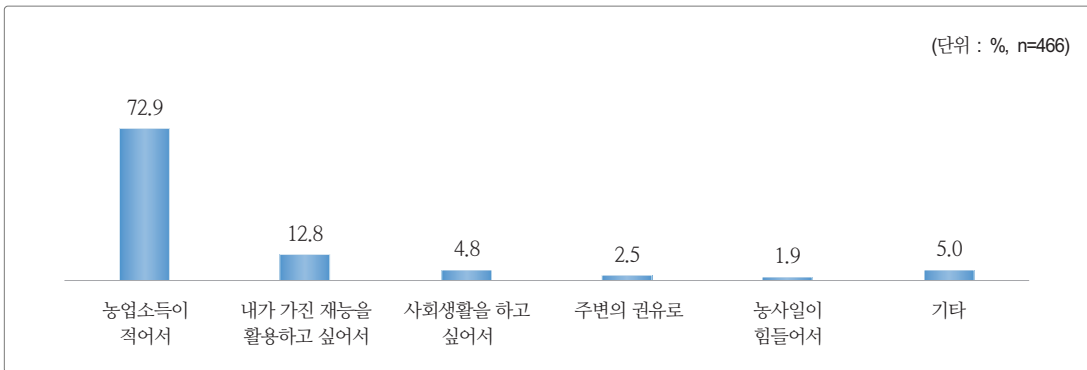
1. 농업생산활동 외 수행하고 있는 경제활동

귀농 가구 중 농업생산활동 외에 추가로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가구는 45.3%로 나머지 54.7%의 가구는 농업생산 활동만 하고 있음. 주로 ‘농산물/가공식품 직접 판매활동’(11.4%), ‘자영업’(9.3%), ‘일반 직장 취업’(8.4%), ‘농산물 가공’(5.9%)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활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농업소득이 적어서’(72.9%)임

[그림 2-18] 농업생산활동 외 수행하고 있는 경제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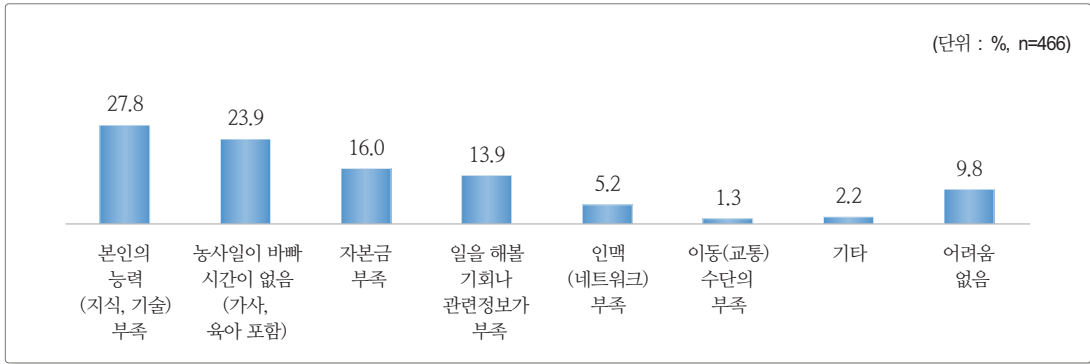
[그림 2-19] 농업생산활동 외 경제활동 수행 이유



2. 농업생산활동 외 경제활동 수행 시 어려움

농업생산활동 외 경제활동 수행시 어려움으로는, ‘능력(지식, 기술) 부족’이 27.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농사일이 바빠 시간 부족’(23.9%), ‘자본금 부족’(16.0%) 등의 순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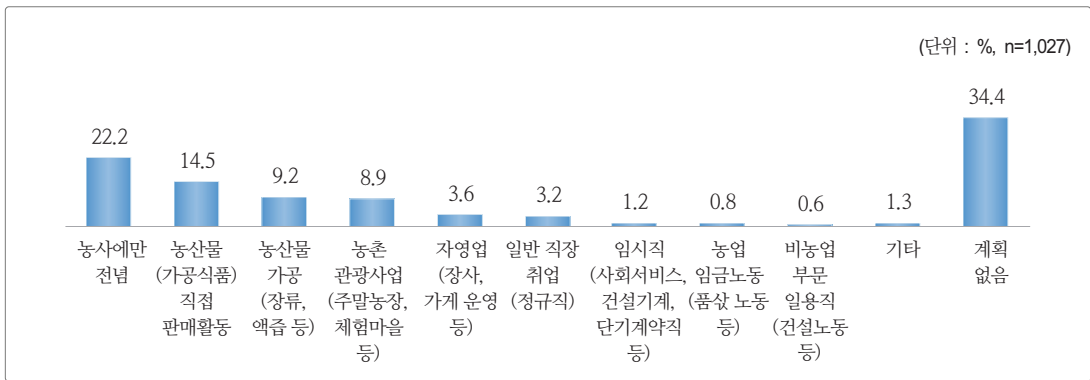
[그림 2-20] 농업생산활동 외 경제활동 수행 시 어려움



3. 향후 추가로 수행하고 싶은 경제활동

향후 하고 싶은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56.6%가 ‘없다’ 혹은 ‘농사에만 전념’하겠다고 응답함. 향후 추가로 수행하고 싶은 경제활동은 ‘농산물 직접 판매’(14.5%), ‘농산물 가공’(9.2%), ‘농촌관광사업’(8.9%) 등으로 추가로 경제활동을 하길 원하는 경우는 주로 농산물 가공 및 유통, 관광 등 6차산업과 관련된 경영활동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됨

[그림 2-21] 향후 추가로 수행하고 싶은 경제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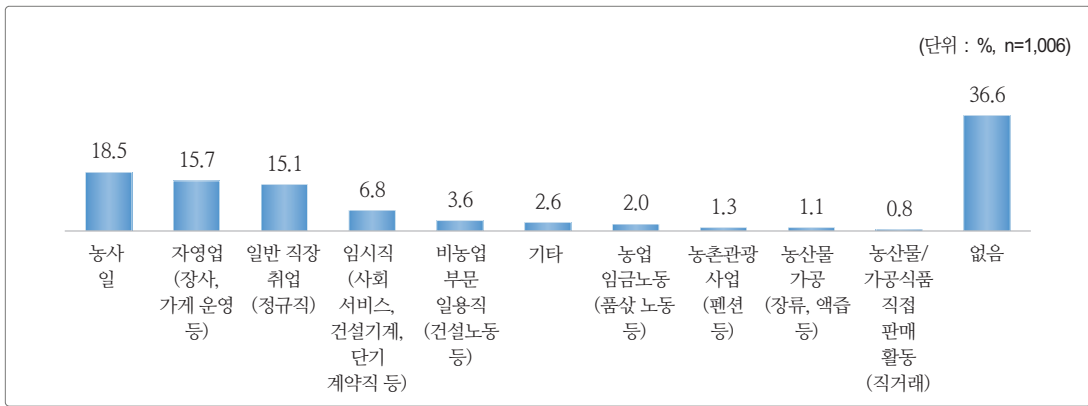


PART 5. 귀촌가구의 경제활동

1. 수행 중인 경제활동

귀촌 가구가 수행하고 있는 경제활동으로 36.6%가 수행하는 경제활동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나머지 63.4%의 가구만이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농사일’(18.5%)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외 ‘자영업’(15.7%), ‘일반 직장 취업’(15.1%), ‘임시직’(6.8%)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농촌관광사업이나 농산물가공, 농산물/가공식품 직거래 등 6차산업 관련 경영 활동을 하는 경우는 3.2%로 조사됨

[그림 2-22] 수행 중인 경제활동



[표 2-8] 수행 중인 경제활동 - 가구주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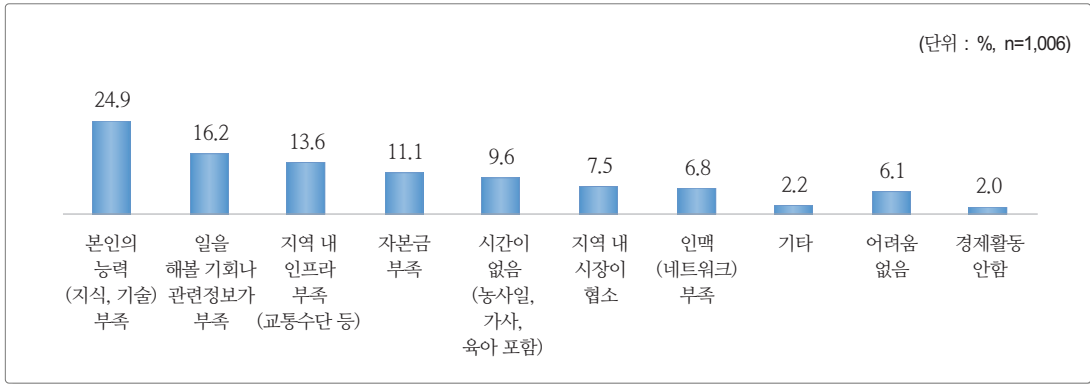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사례수)	농사일	자영업 (장사, 가게 운영 등)	일반 직장 취업 (정규직)	임시직 (사회 서비스, 건설 기계, 단기 계약직 등)	비농업 부문 일용직 (건설 노동 등)	기타	농업 임금노동 (품삯 노동 등)	농촌관광 사업 (펜션 등)	농산물 가공 (장류, 액즙 등)	농산물/가공식품 직접 판매 활동 (직거래)	없음
남성	(864)	19.6	15.8	15.9	6.7	3.5	2.8	1.9	1.3	1.1	0.8	35.0
여성	(142)	11.9	14.9	10.0	7.1	4.1	2.0	2.4	1.2	1.1	0.7	46.2

2. 경제활동 수행 시 어려움

귀촌 가구가 경제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능력(지식, 기술) 부족’(24.9%), ‘일을 해볼 기회나 관련 정보 부족’(16.2%), ‘지역 내 인프라 부족’(13.6%) 등으로 조사됨

[그림 2-23] 경제활동 수행 시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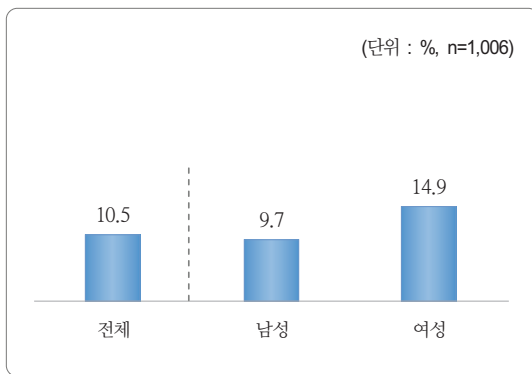


3. 창업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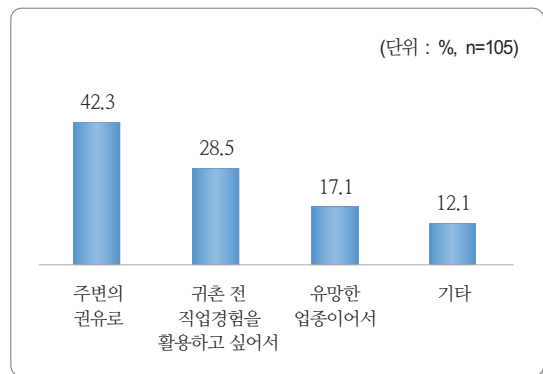
귀촌 후 창업 활동 경험에 대해서는 10.5%만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가구주의 성별이 남성(9.7%)인 경우보다 여성(14.9%)인 경우 귀촌 후 창업활동을 한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됨

창업 활동은 ‘주변의 권유’(42.3%), ‘귀촌 전 직업 경험을 활용하고 싶어서’(28.5%) 등의 계기로 시작한 것으로 조사됨

[그림 2-24] 지역 내 창업 활동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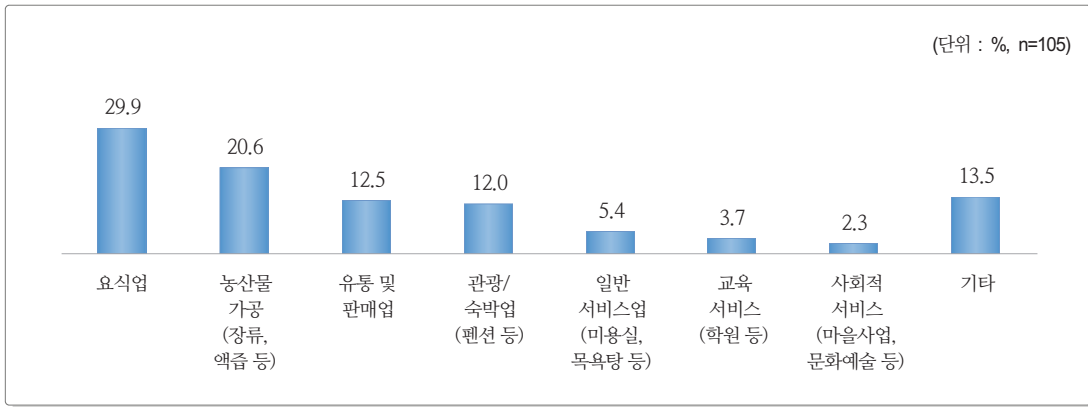
[그림 2-25] 창업 활동 이유



4. 주요 창업 아이템

주요 창업 아이템은 ‘요식업’(29.9%), ‘농산물 가공’(20.6%), ‘유통 및 판매업’(12.5%), ‘관광/숙박업’(12.0%)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주 성별이 남성인 경우 ‘유통 및 판매업’이 14.9%, ‘관광/숙박업’은 13.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여성인 경우 ‘요식업’이 36.4%, ‘교육 서비스’ 14.3%, ‘일반 서비스업’ 8.6%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됨

[그림 2-26] 주요 창업 아이템



[표 2-9] 주요 창업 아이템 - 가구주 성별

(단위 : %)

구분	(사례수)	요식업	농산물 가공 (장류, 액즙 등)	유통 및 판매업	관광/숙박업 (펜션 등)	일반 서비스업 (미용실, 목욕탕 등)	교육 서비스 (학원 등)	사회적 서비스 (마을사업, 문화예술 등)	기타
남성	(84)	28.3	21.2	14.9	13.8	4.6	1.1	2.9	13.3
여성	(21)	36.4	18.5	3.2	4.9	8.6	14.3	0.0	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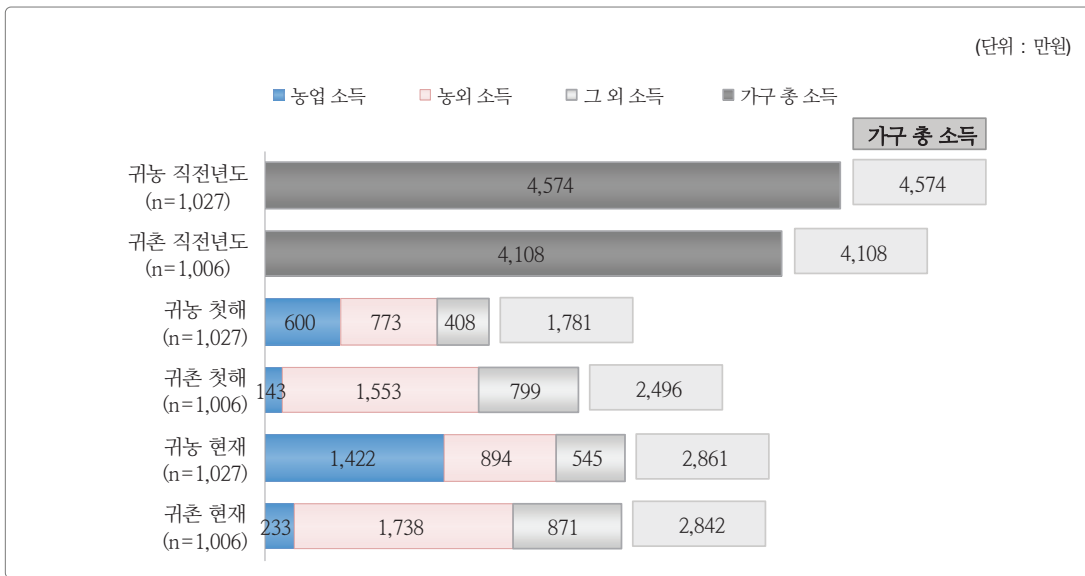
PART 6. 귀농/귀촌 가구의 소득

1. 귀농/귀촌 전후 가구소득

귀농 가구의 연간 가구소득은 귀농 직전에 평균 4,574만원이었으나, 귀농 첫해에는 1,781만원으로 1/3 가량으로 감소하였다가 현재는 평균 2,861만원 정도로 증가하였고, 귀촌 가구의 경우 귀촌 직전에 평균 4,108만원이었으나, 귀촌 첫해에는 2,496만원으로 60% 수준으로 감소하였다가 현재는 평균 2,842만원 정도로 귀농 가구와 비슷한 수준을 보임

귀농 가구의 귀농 첫해의 농업소득은 600만원으로 전체 소득의 1/3 정도를 차지하였으나, 현재는 절반 가량인 1,422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귀촌 가구 또한 귀촌 첫해 농업소득이 143만원에서 현재 233만원으로 증가하였지만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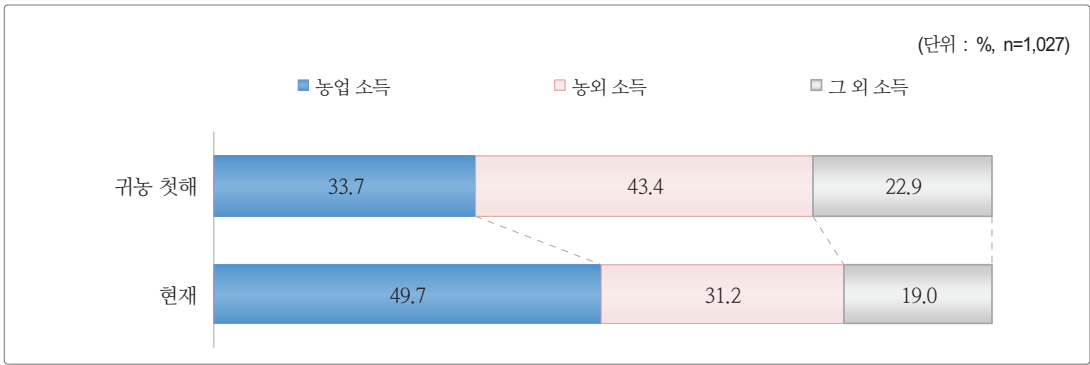
[그림 2-27] 귀농/귀촌 전후 가구소득



2. 귀농 가구의 소득 구성

귀농 가구의 귀농 첫째 가구총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33.7%였으나, 현재 가구총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49.7%로 증가하였음. 농외소득과 그 외 소득이 가구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3.4%에서 31.2%로, 22.9%에서 19.0%로 감소하였음

[그림 2-28] 귀농 가구의 소득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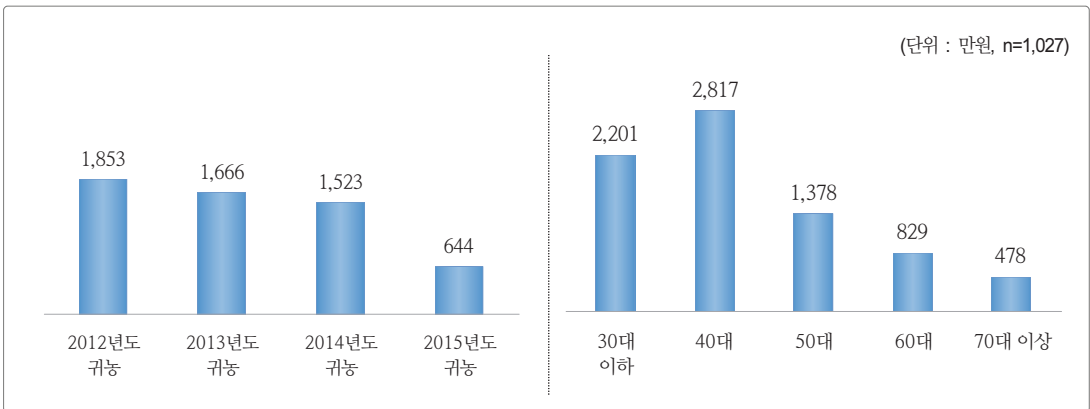


3. 귀농 가구의 농업소득

가장 최근에 귀농한 2015년도 귀농 가구의 농업소득은 644만원에 불과하지만, 귀농한 연차가 오래될 수록 농업소득이 증가하여, 귀농 5년차인 2012년도 귀농가구의 농업소득은 1,853만원으로 집계됨

한편, 가구주 연령이 40대인 가구의 농업소득이 2,817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농업소득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

[그림 2-29] 귀농 가구의 농업소득 - 귀농년도별 및 가구주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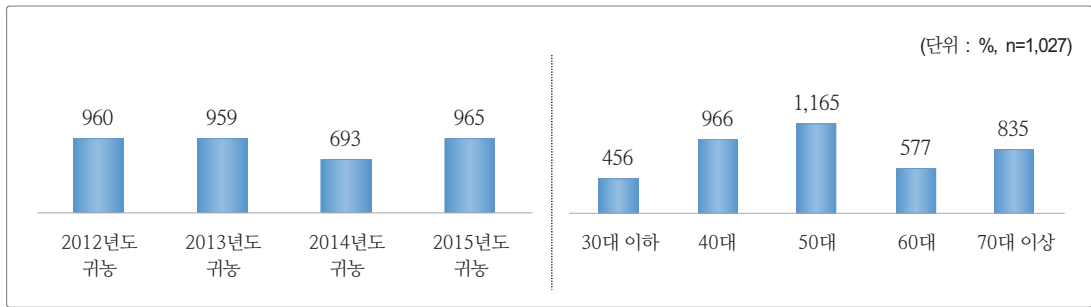


4. 귀농 가구의 농외소득

귀농한 연도에 따른 농외소득의 차이는 크지 않은 가운데, 2014년에 귀농한 가구의 경우 농외소득이 693만원으로 비교적 낮았음

한편, 가구주 연령이 50대인 가구의 농외소득이 1,165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대 이하에서는 456만원으로 가장 낮았음

[그림 2-30] 귀농 가구의 농외소득 - 귀농년도별 및 가구주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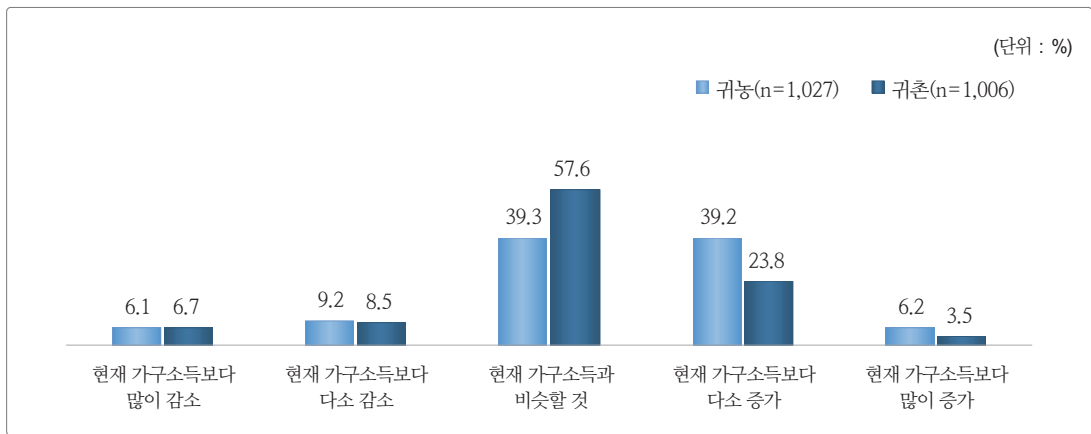


5. 가구소득전망

가구소득에 대해서는 향후 ‘증가할 것(많이+다소)’이라는 의견은 귀농 가구가 45.4%, 귀촌 가구는 27.3%로 귀농 가구가 더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었으며, ‘감소할 것(많이+다소)’이라는 의견의 귀농과 귀촌 모두 15%내외로 조사됨

한편, 가구주 연령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증가할 것(많이+다소)’이라는 의견이 높아지는 경향이 존재함

[그림 2-31] 가구소득전망



[표 2-10] 가구소득전망 - 가구주 연령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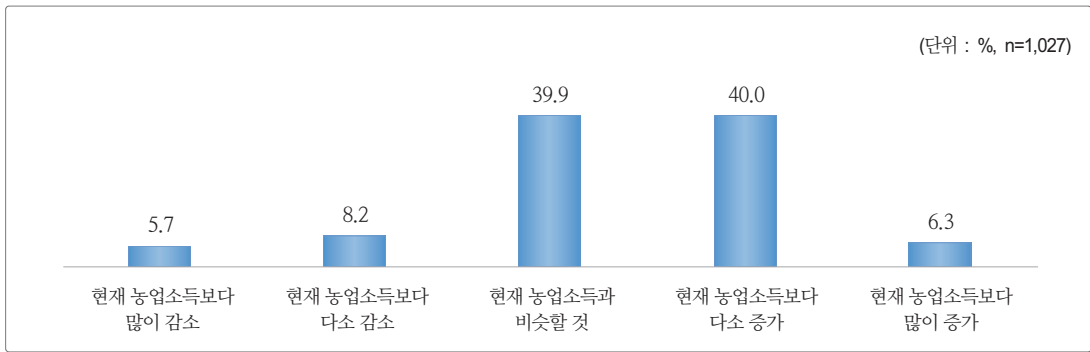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현재 가구소득보다 많이 감소	현재 가구소득보다 다소 감소	현재 가구소득과 비슷할 것	현재 가구소득보다 다소 증가	현재 가구소득보다 많이 증가	계	
귀농	30대 이하	(56)	1.7	13.2	22.2	↑ 49.6	↑ 13.2	100.0
	40대	(160)	4.4	8.3	36.8	↑ 40.6	↑ 9.8	100.0
	50대	(432)	8.1	8.4	37.9	↑ 38.8	↑ 6.8	100.0
	60대	(316)	4.6	9.2	40.9	↑ 41.9	↑ 3.4	100.0
	70대 이상	(64)	7.4	13.1	62.3	↑ 16.1	↑ 1.1	100.0
귀촌	30대 이하	(93)	3.2	5.8	61.0	↑ 27.1	↑ 2.9	100.0
	40대	(191)	7.7	6.8	48.0	↑ 35.1	↑ 2.4	100.0
	50대	(322)	3.6	12.4	51.3	↑ 27.9	↑ 4.8	100.0
	60대	(299)	7.6	6.1	68.4	↑ 14.4	↑ 3.6	100.0
	70대 이상	(100)	14.9	9.4	60.3	↑ 13.9	↑ 1.5	100.0

6. 귀농가구의 농업소득 전망

귀농가구의 농업소득 또한 46.3%가 ‘증가할 것(많이+다소)’이라고 응답해 ‘감소(많이+다소)’ 전망 13.9%보다 높아 전체적으로 가구소득에 이어 농업소득 또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였음

가구주 연령이 30대 이하의 가구에서는 농업소득이 ‘증가(많이+다소)’ 전망이 60.7%로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70대 이상의 가구에서는 ‘감소(많이+다소)’전망이 24.1%로 높게 나타나 연령대별 차이가 발견됨

[그림 2-32] 귀농가구의 농업소득 전망



[표 2-11] 귀농가구의 농업소득 전망 - 가구주 연령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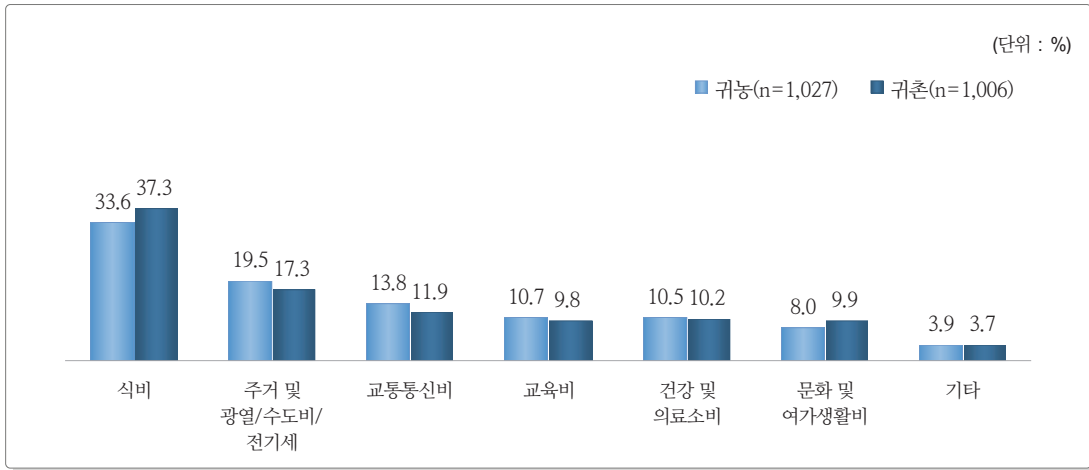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사례수)	현재 농업소득보다 많이 감소	현재 농업소득보다 다소 감소	현재 농업소득과 비슷할 것	현재 농업소득보다 다소 증가	현재 농업소득보다 많이 증가	계	
가구주 연령	30대 이하	(56)	3.4	12.4	23.5	45.1	15.6	100.0
	40대	(160)	4.6	5.9	38.1	42.3	9.2	100.0
	50대	(432)	5.8	6.4	41.3	39.8	6.6	100.0
	60대	(316)	5.9	9.6	37.2	43.4	3.9	100.0
	70대 이상	(64)	8.1	16.0	62.1	13.8	0.0	100.0

7. 생활비 비중이 큰 항목(1순위)

귀농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평균 190만원, 귀촌 가구의 월 평균 생활비는 184만원 정도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한 달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항목역시 ‘식비’, ‘주거 및 광열/수도비/전기세’, ‘교통통신비’ 등으로 비슷하게 조사된 가운데, 가구주 연령이 40-50대인 경우와 가구원 수가 4명인 경우 ‘교육비’의 비중이 높았으며, 가구주 연령이 60대 이상인 경우 ‘건강 및 의료소비’의 비중이 높았음

[그림 2-33] 생활비 비중이 큰 항목(1순위)



[표 2-12] 생활비 비중이 큰 항목(1순위) - 가구주 연령별 및 가구원수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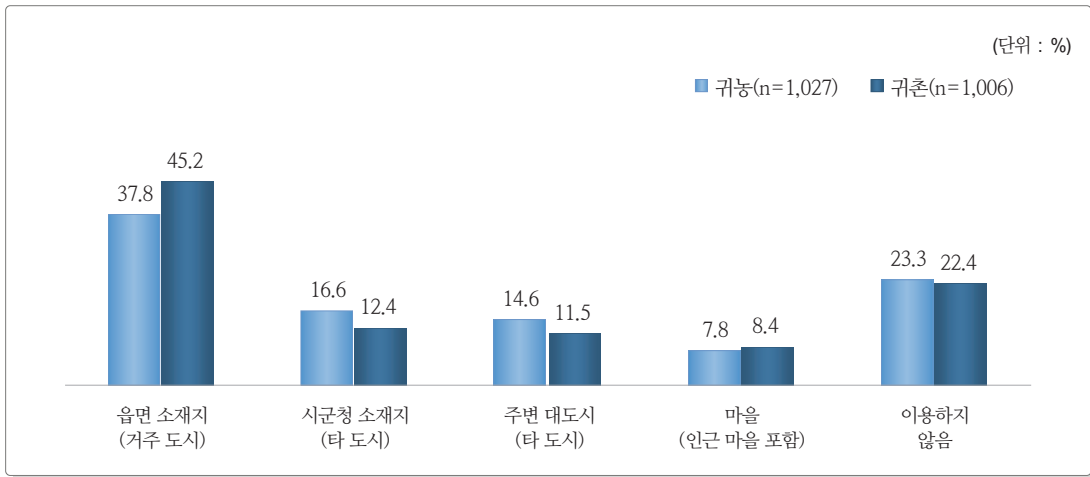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사례수)	식비	주거 및 광열/수도비/전기세	교통통신비	교육비	건강 및 의료소비	문화 및 여가생활비	기타	계	
귀농	가구주 연령									
	30대 이하	(56)	48.2	14.3	10.2	9.3	11.0	5.4	1.6	100.0
	40대	(160)	37.5	19.8	10.3	20.7	2.9	5.3	3.4	100.0
	50대	(432)	29.9	20.4	14.7	14.9	8.3	7.3	4.5	100.0
	60대	(316)	35.3	18.2	15.3	1.9	14.1	10.8	4.3	100.0
	70대 이상	(64)	27.7	23.9	11.7	1.8	25.2	8.6	1.1	100.0
	가구원수									
	1명	(183)	33.3	22.9	19.7	5.3	8.9	7.8	2.1	100.0
	2명	(505)	33.6	20.7	15.3	6.0	11.1	9.2	3.9	100.0
	3명	(162)	34.5	18.4	9.2	12.7	10.6	7.0	7.6	100.0
4명 이상	(177)	33.1	13.5	7.4	27.6	10.0	6.0	2.4	100.0	
귀촌	가구주 연령									
	30대 이하	(93)	33.2	25.5	8.0	14.4	3.6	10.8	4.5	100.0
	40대	(191)	37.8	13.8	12.8	18.6	4.4	10.6	2.0	100.0
	50대	(322)	34.2	14.0	15.4	13.7	9.1	8.7	4.8	100.0
	60대	(299)	41.8	14.8	10.3	1.7	15.5	12.3	3.6	100.0
	70대 이상	(100)	36.5	34.8	7.2	0.0	14.7	4.2	2.6	100.0
	가구원수									
	1명	(210)	40.2	19.8	14.9	3.2	11.5	7.7	2.6	100.0
	2명	(478)	37.5	18.6	11.9	4.7	13.2	10.3	3.8	100.0
	3명	(167)	32.3	17.9	12.3	12.9	7.8	10.5	6.4	100.0
4명 이상	(151)	38.0	9.3	7.1	31.5	1.5	11.0	1.7	100.0	

8. 문화/여가활동 장소

귀농 및 귀촌 가구가 문화/여가활동을 즐기는 장소는 ‘읍면소재지’의 비중이 높았으나, 아예 이용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20% 이상으로 높았음. 특히, 가구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문화/여가활동을 즐기지 않는다는 비율이 증가함

[그림 2-34] 문화/여가활동 장소



[표 2-13] 문화/여가활동 장소 - 가구주연령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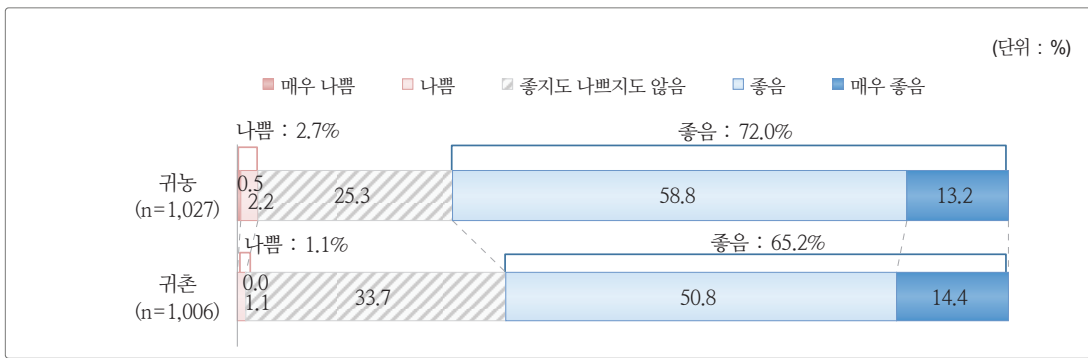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읍면 소재지 (거주 도시)	시군청 소재지 (타 도시)	주변 대도시 (타 도시)	마을 (인근 마을 포함)	이용하지 않음	계	
귀농	30대 이하	(56)	51.2	10.1	20.7	3.5	14.5	100.0
	40대	(160)	37.4	16.7	23.8	5.7	16.4	100.0
	50대	(432)	38.3	17.1	14.0	7.9	22.8	100.0
	60대	(316)	36.3	17.5	10.6	8.9	26.7	100.0
	70대 이상	(64)	30.1	14.6	9.5	10.9	34.9	100.0
귀촌	30대 이하	(93)	46.5	12.3	12.7	9.1	19.5	100.0
	40대	(191)	49.4	18.2	13.3	6.8	12.3	100.0
	50대	(322)	45.5	13.3	14.1	7.3	19.7	100.0
	60대	(299)	45.3	8.6	10.7	9.3	26.1	100.0
	70대 이상	(100)	35.0	10.3	1.1	12.0	41.5	100.0

PART 7. 지역 사회 참여

1. 지역주민들과의 관계

귀농 가구와 지역주민과의 관계 평가에 대해 72.0%의 응답자가 ‘매우 좋음+좋은 편이다’라고 응답하였으며 2.7%만이 관계가 ‘나쁨(매우 나쁨+나쁜 편)’이라고 응답함. 귀촌 가구 역시 지역주민과의 관계 평가에 대해 65.2%의 응답자가 ‘매우 좋음+좋은 편이다’라고 응답하여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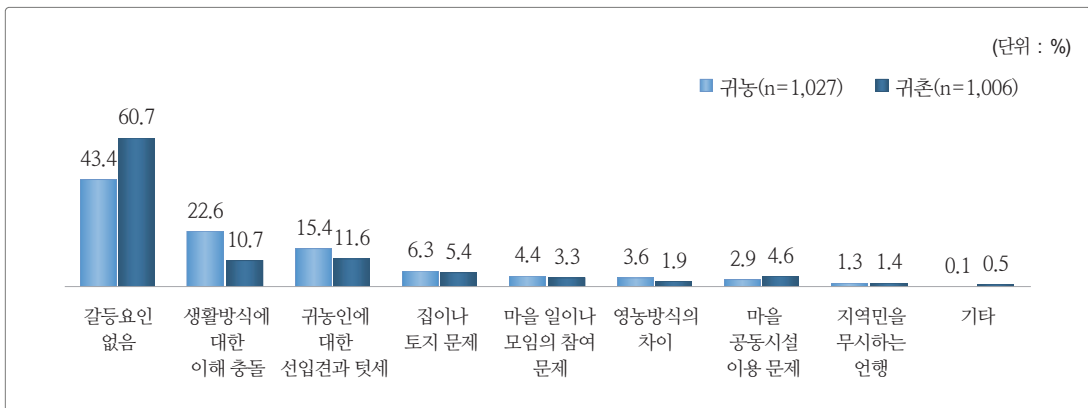
[그림 2-35] 지역주민들과의 관계



2.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요인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들과의 주된 갈등요인으로는 ‘생활방식에 대한 이해 충돌’, ‘귀농인에 대한 선입견과 텃세’ 등을 꼽았으며, 갈등요인이 없다는 의견 또한 귀농 43.4%와 귀촌 60.7%로 많았음

[그림 2-36]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요인



3. 참여하고 있는 지역 활동

귀농 가구가 참여하고 있는 지역활동으로는 ‘마을회의나 행사’가 82.7%로 가장 많았고 ‘지역농업/농민 단체’ 참여율은 57.4%, ‘귀농귀촌인 모임’이 54.0%, ‘일반 사회단체’가 49.3%의 순으로 참여하고 있었음. 귀촌 가구의 경우 ‘마을 회의나 행사’가 64.2%로 높게 나타났을 뿐 다른 활동에서는 참여율이 20%대로 상대적으로 저조함

이러한 지역활동에 참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친목 도모’인 것으로 조사됨

[표 2-14] 참여하고 있는 지역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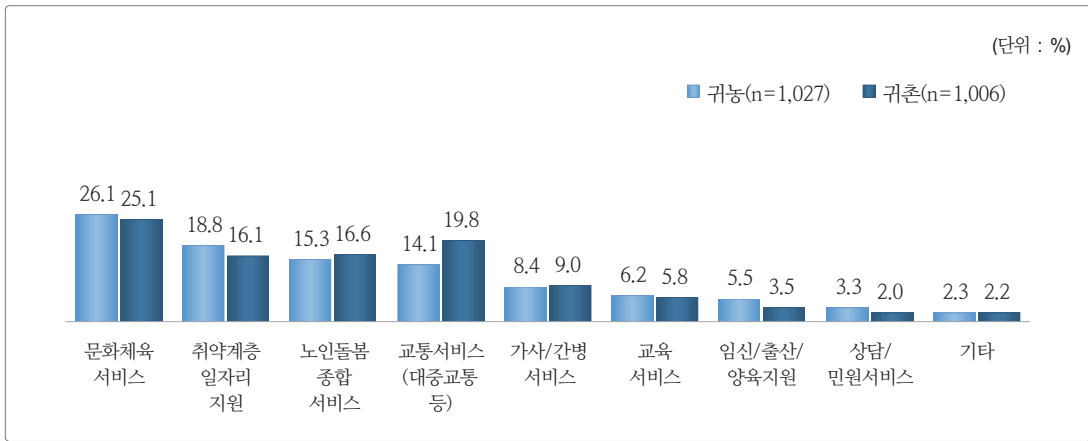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	자주 참여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	자주 참여하나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지는 않음	가끔 참여함	참여함	거의 참여하지 않음
귀농	마을 회의나 행사	6.3	27.8	22.6	26.0	82.7	17.3
	지역 농업/농민 단체	5.9	17.7	15.1	18.7	57.4	42.6
	일반 사회단체	4.1	15.0	14.4	15.8	49.3	50.8
	귀농귀촌인 모임	7.3	19.4	13.8	13.5	54.0	46.1
귀촌	마을 회의나 행사	2.6	14.1	18.5	29.0	64.2	35.7
	지역 농업/농민 단체	1.0	4.6	6.0	8.9	20.5	79.4
	일반 사회단체	2.1	7.3	6.7	10.2	26.3	73.8
	귀농귀촌인 모임	2.1	6.5	6.9	8.7	24.2	75.8

4. 거주지에 확충되어야 하는 공공서비스

거주지에 확충되어야 하는 공공서비스로는 ‘문화체육 서비스’가 귀농 가구(26.1%)와 귀촌 가구(25.1%) 모두에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귀농 가구는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18.8%)이 귀촌 가구는 ‘교통 서비스’(19.8%)라고 응답함

[그림 2-37] 거주지에 확충되어야 하는 공공서비스



[표 2-15] 거주지에 확충되어야 하는 공공서비스(1+2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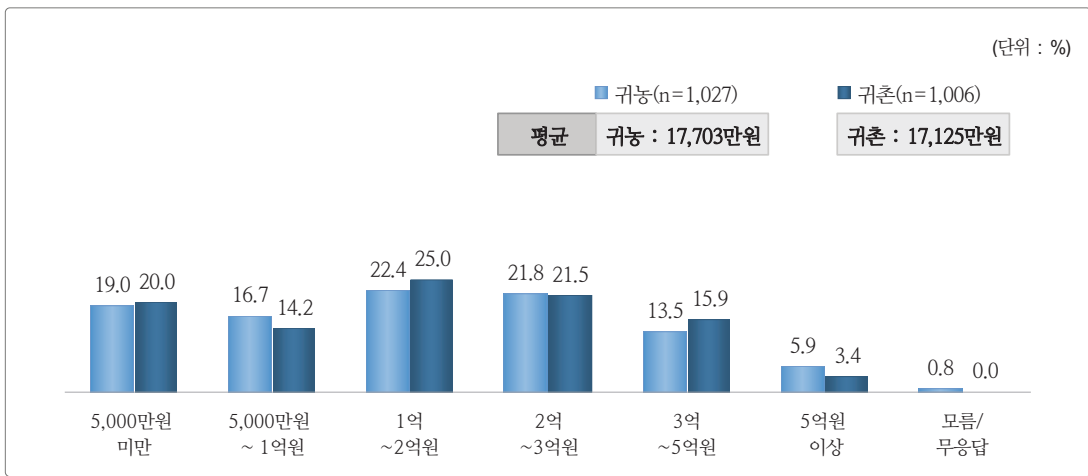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문화체육 서비스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	교통 서비스 (대중교통 등)	교육 서비스	가사/간병 서비스	상담/민원 서비스	임신/출산/양육지원	기타
귀농	(1,027)	42.0	38.5	28.7	28.3	15.2	14.6	11.5	7.3	3.0
귀촌	(1,006)	43.1	36.0	30.5	37.0	15.5	15.5	6.5	4.9	3.0

PART 8. 귀농/귀촌 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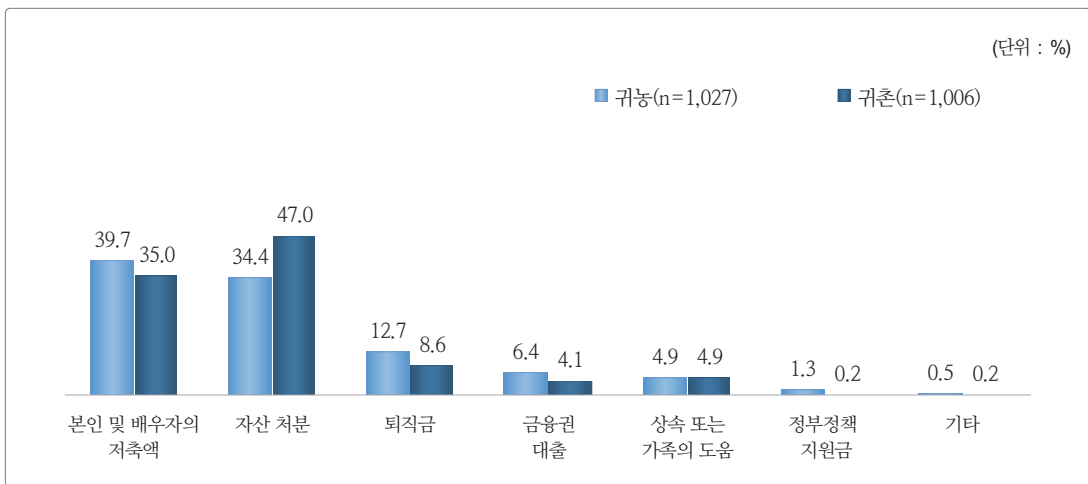
1. 정착 자금

귀농 가구의 정착자금은 평균 1억 7,703만원, 귀촌 가구는 1억 7,125만원 정도로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귀농귀촌 정착자금은 주로 ‘본인 및 배우자의 저축액’과 ‘자산 처분’ 등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조사됨

[그림 2-38] 정착 자금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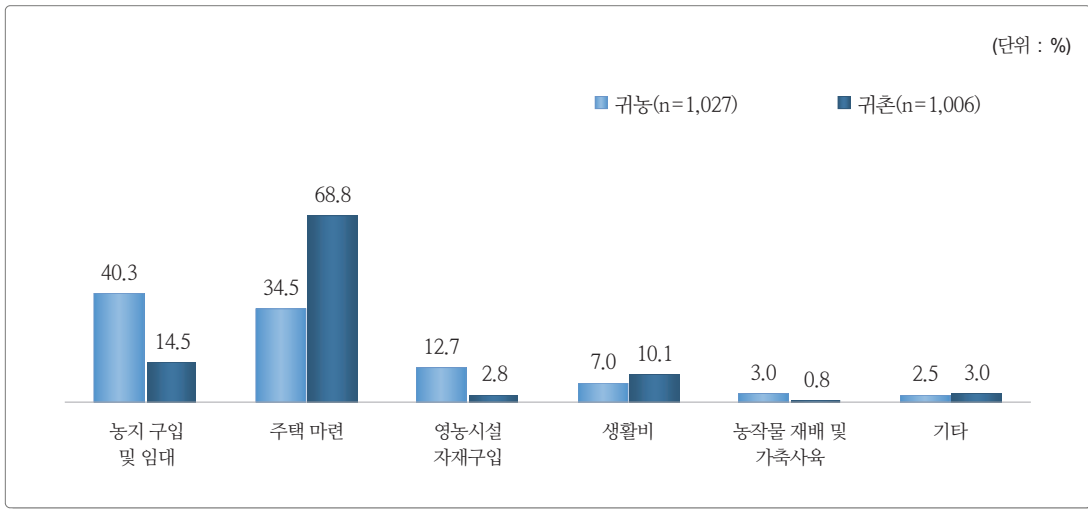
[그림 2-39] 정착자금 마련 경로



2. 정착자금 주요 사용처

정착자금이 가장 많이 사용된 곳으로는 귀농 가구의 경우 '농지 구입 및 임대'(40.3%)와 '주택마련'(34.5%)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귀촌 가구의 경우 '주택마련'에 사용했다는 비중이 68.8%로 매우 높게 나타남

[그림 2-40] 정착자금 주요 사용처



[표 2-16] 정착자금 주요 사용처(1+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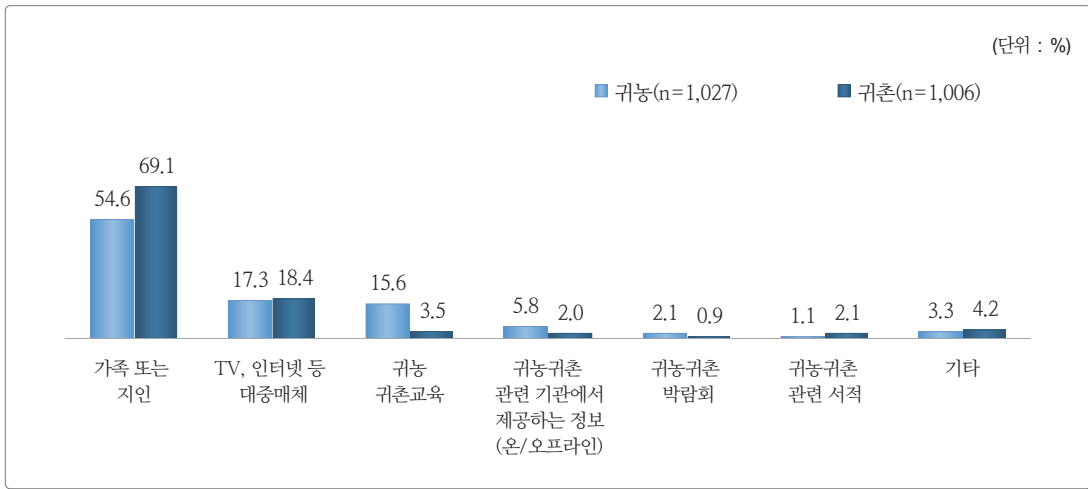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사례수	농지 구입 및 임대	주택마련	영농시설 자재구입	생활비	농작물 재배 및 가축사육	기타
귀농	(1,027)	65.4	61.1	31.1	22.2	9.2	3.1
귀촌	(1,006)	37.9	81.9	6.3	49.3	2.8	6.1

3. 귀농/귀촌 정보 취득 경로

귀농귀촌 정보 취득 경로로는 1순위 응답 기준으로 ‘가족 또는 지인’에게서 얻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귀촌의 경우 69.1%로 특히 더 높았음. 그 외 ‘TV, 인터넷 등 대중 매체’, ‘귀농귀촌교육’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귀촌인의 경우 ‘귀농귀촌교육’, ‘귀농귀촌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 등을 통해 정보를 얻은 경우는 귀농인에 비해 적은 것으로 조사됨

[그림 2-41] 귀농/귀촌 정보 취득 경로



[표 2-17] 귀농/귀촌 정보 취득 경로(1+2순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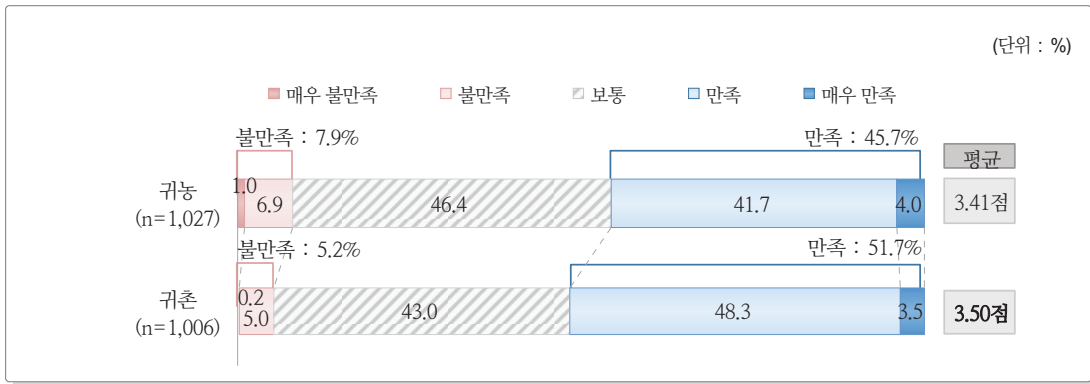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가족 또는 지인	TV, 인터넷 등 대중매체	귀농귀촌 교육	귀농귀촌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 (온/오프라인)	귀농귀촌 관련 서적	귀농귀촌 박람회	기타
귀농	(1,027)	63.4	36.7	32.3	18.0	8.1	5.8	5.6
귀촌	(1,006)	81.1	45.8	12.0	5.9	5.4	2.1	5.5

4. 귀농/귀촌 준비 과정 만족도

귀농 가구의 45.7%, 귀촌 가구의 51.7%가 귀농귀촌 준비 과정에 대해 ‘만족(매우 만족+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불만족(매우 불만족+불만족)’하는 경우는 각각 7.9%와 5.2%로 나타남

한편, 최근에 귀농한 경우 일수록 귀농 준비 과정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많아지는 경향이 존재함

[그림 2-42] 귀농/귀촌 준비 과정 만족도



[표 2-18] 귀농/귀촌 준비 과정 만족도 - 첫귀농귀촌년도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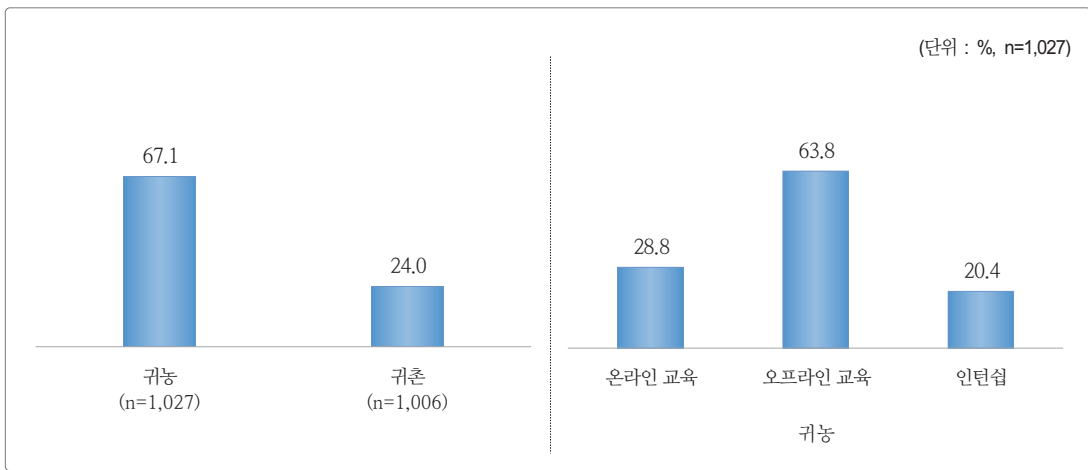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불만족				보통	만족			계	평균 (점)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만족			
귀농	2012년도	(260)	0.9	8.1	9.0	49.9	37.0	4.1	41.1	100.0	3.35
	2013년도	(253)	0.4	5.6	6.0	47.4	43.7	2.9	46.6	100.0	3.43
	2014년도	(258)	1.1	8.6	9.7	43.6	42.1	4.7	46.8	100.0	3.41
	2015년도	(257)	1.5	5.5	6.9	44.7	44.2	4.1	48.4	100.0	3.44
귀촌	2013년도	(315)	0.2	3.8	3.9	45.4	48.6	2.1	50.7	100.0	3.49
	2014년도	(336)	0.3	6.0	6.3	37.5	51.9	4.3	56.2	100.0	3.54
	2015년도	(355)	0.2	5.2	5.4	46.1	44.6	3.9	48.5	100.0	3.47

PART 9. 귀농/귀촌 관련 교육 및 훈련

1. 귀농귀촌 교육 이수 경험

귀농귀촌 교육을 이수한 귀농 가구는 67.1%로 집계되었으며 귀촌 가구는 24.0%로 귀농 가구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으로 조사됨. 귀농 가구의 귀농귀촌 교육 중 ‘오프라인 교육’에 대한 이수 경험이 63.8%로 가장 높았으며,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귀농 가구는 28.8%, ‘선도 농가 인턴십’을 경험한 귀농 가구는 20.4%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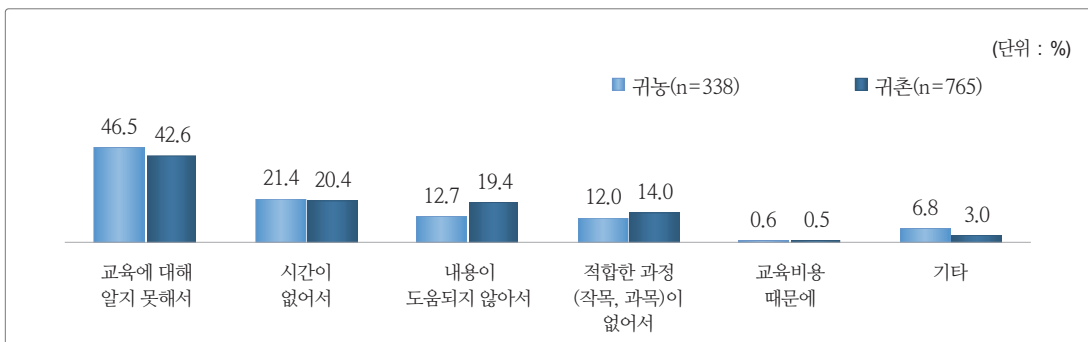
[그림 2-43] 귀농귀촌 교육 이수 경험



2. 귀농귀촌 교육 미이수 이유

귀농귀촌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귀농귀촌 교육 미이수자의 45% 가량은 ‘교육에 대해 알지 못해서’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외 ‘시간이 없어서’, ‘내용이 도움이 되지 않아서’ 등이 언급되어 귀농귀촌 교육에 대한 홍보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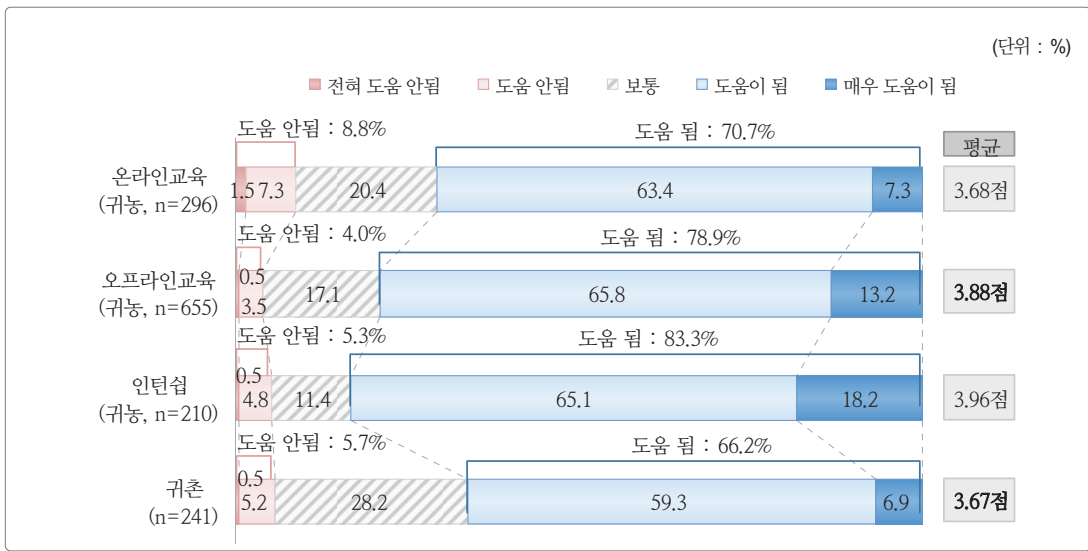
[그림 2-44] 귀농귀촌 교육 미이수 이유



3. 이수 교육 도움 정도

이수 교육의 도움 정도에 대해서는 온라인 교육의 경우 70.7%가 ‘도움이 된다(매우+도움이 됨)’고 응답했으며, 오프라인 교육은 78.9%, 선도 농가 인턴쉽은 83.3%로 조사되어 선도 농가 인턴쉽에 대한 평가가 가장 좋았음. 귀촌 가구의 경우 이수 교육에 대해 66.2%가 ‘도움이 된다(매우+도움이 됨)’고 응답해 귀농 가구에 비해 다소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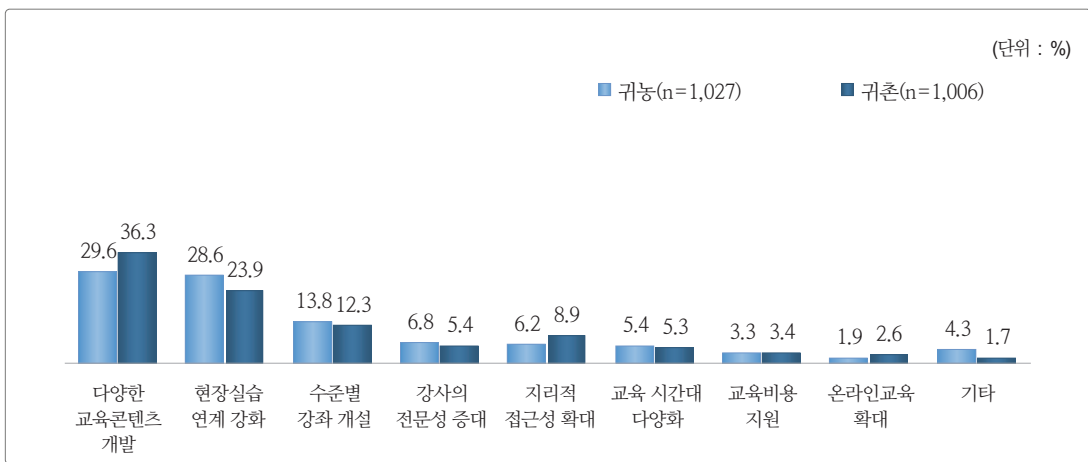
[그림 2-45] 이수 교육 도움 정도



4. 향후 귀농귀촌 교육 개선사항

향후 귀농귀촌교육에서 개선되어야할 점으로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 ‘현장실습 연계 강화’, ‘수준별 강좌 개설’ 등이 언급됨

[그림 2-46] 향후 귀농귀촌 교육 개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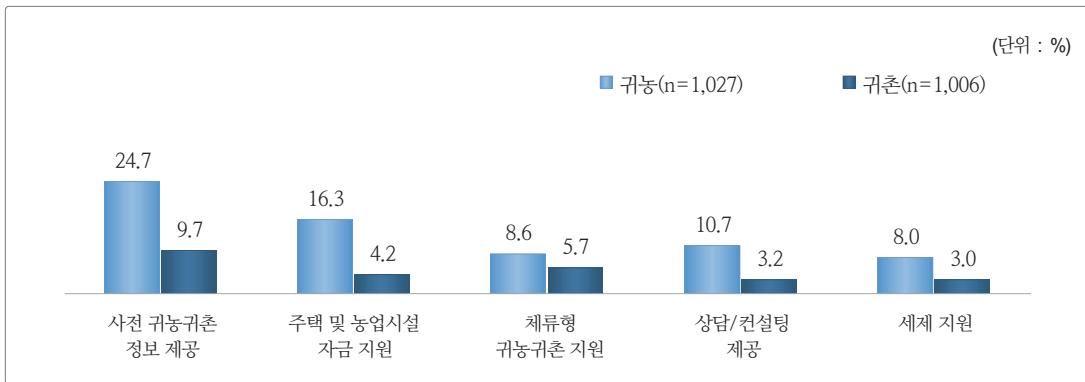


PART 10. 귀농 관련 정책 수혜 경험 및 평가

1. 중앙정부의 귀농귀촌정책 수혜 경험

중앙정부의 귀농귀촌정책 중 수혜 경험이 가장 많았던 정책은 ‘사전 귀농귀촌 정보 제공’으로 귀농 가구의 24.7%, 귀촌 가구의 9.7%의 응답자가 수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 다음으로 귀농 가구의 경우 ‘주택 및 농업시설 자금 지원’, ‘상담/컨설팅 제공’등의 정책의 수혜 경험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귀촌 가구의 경우 수혜 경험이 10% 미만으로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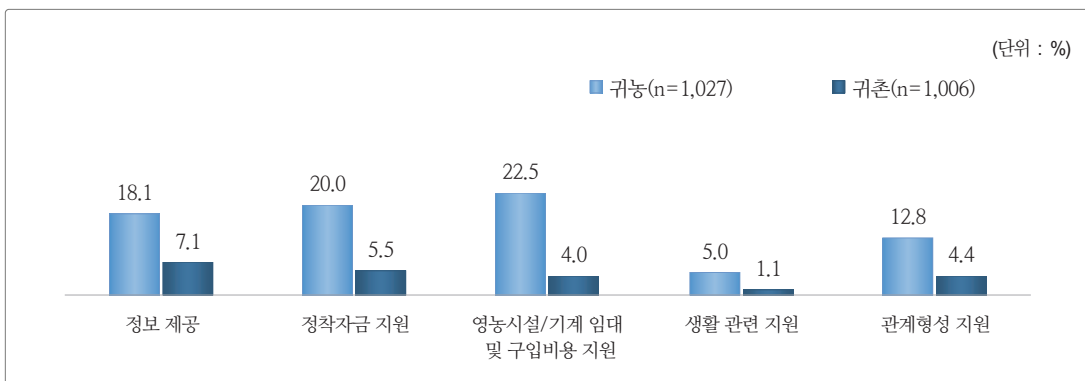
[그림 2-47] 중앙정부의 귀농귀촌정책 수혜 경험



2. 지자체의 귀농귀촌정책 수혜 경험

지자체의 귀농귀촌정책에 대해서는 귀농 가구 기준, ‘영농시설/기계 임대 및 구입비용 지원’의 경험률이 22.5%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정착자금 지원’이 20.0%, ‘정보 제공’ 18.1%, 관계형성 지원이 12.8%, ‘생활 관련 지원’ 5.0%의 순으로 조사됨. 귀촌 가구의 경우 수혜 경험이 1-7% 수준으로 매우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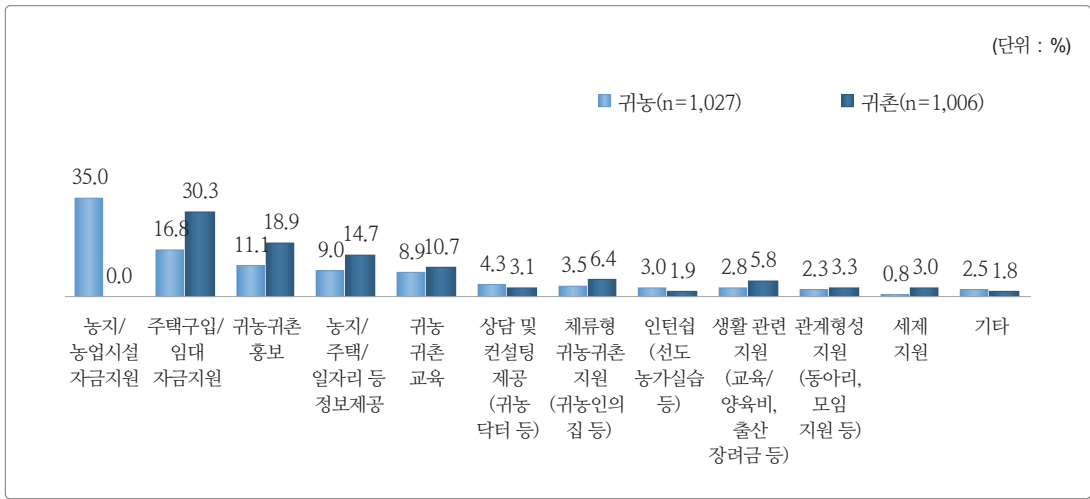
[그림 2-48] 지자체의 귀농귀촌정책 수혜 경험



3.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책

귀농귀촌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귀농 가구의 경우 ‘농지/농업시설 자금지원’ 관련 정책이 35.0%로 가장 높았으며, 귀촌 가구의 경우 ‘주택구입/임대 자금 지원’ 관련 정책이 30.3%로 가장 많이 언급되었음. 이어서 ‘귀농/귀촌 홍보’, ‘농지/주택/일자리 등 정보 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됨

[그림 2-49]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책



[표 2-19]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책(1+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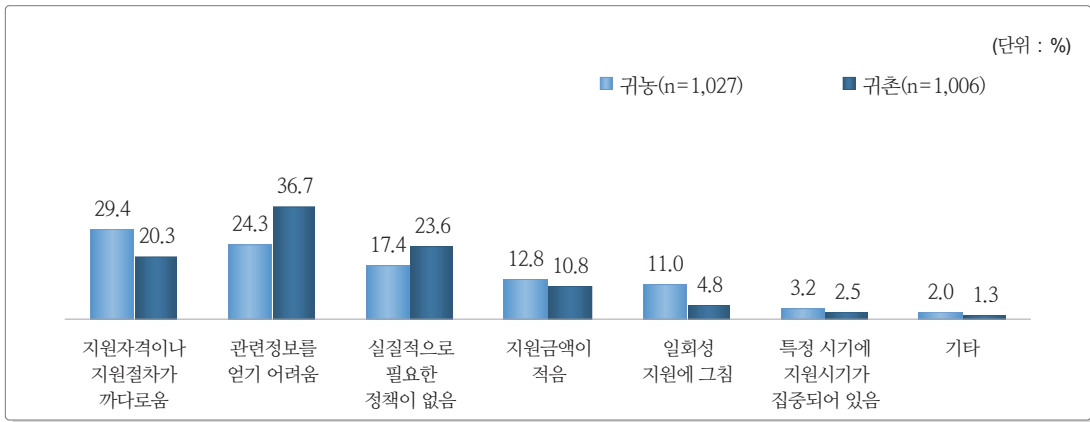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사례수	농지/농업시설 자금 지원	주택 구입/임대 자금 지원	농지/주택/일자리 등 정보 제공	귀농 귀촌 교육	귀농 귀촌 홍보	상담 및 컨설팅 제공 (귀농 닥터 등)	체류형 귀농 귀촌 지원 (귀농인의 집 등)	인턴십 (선도 농가실습 등)	생활 관련 지원 (교육/양육비, 출산 장려금 등)	관계형성 지원 (동아리, 모임 지원 등)	세계 지원	기타
귀농	(1,027)	57.6	36.0	20.7	16.9	15.3	10.4	8.8	8.4	6.8	6.3	3.8	3.7
귀촌	(1,006)	-	52.4	31.8	18.8	27.5	10.6	14.7	4.7	13.9	9.5	8.7	2.5

4. 현재 귀농/귀촌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

현재 귀농귀촌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귀농 가구는 ‘지원자격이나 절차가 까다롭다’(29.4)는 점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으며, 귀촌 가구의 경우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렵다’(36.7)는 점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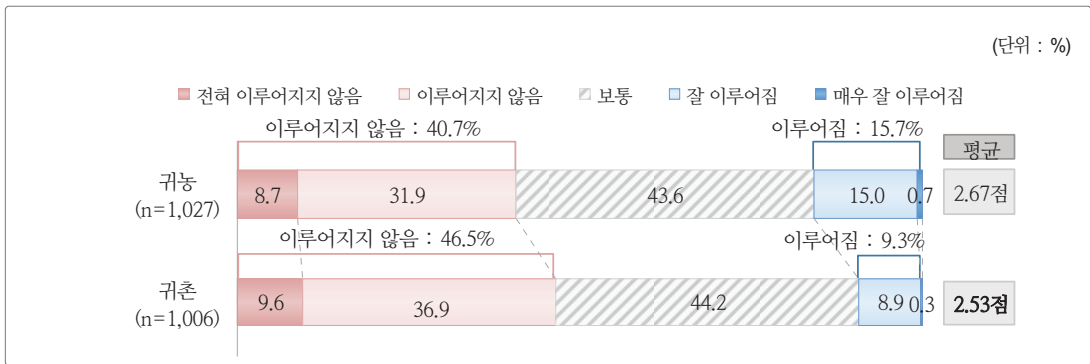
[그림 2-50] 현재 귀농/귀촌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



5. 거주 지자체의 귀농귀촌 지원 정도

거주 지자체의 귀농귀촌 지원 정도에 대해서는 귀농 가구의 15.7%, 귀촌 가구의 9.3%만이 ‘잘 이루어진다(매우+잘 이루어짐)’고 평가하였고, 귀농 가구의 40.7%, 귀촌 가구의 46.5%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전혀+이루어지지 않음)’고 응답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하였음

[그림 2-51] 거주 지자체의 귀농귀촌 지원 정도



6. 역귀농·역귀촌율

조사 결과 귀농 후 정착율은 92% 수준이며, 동 지역 이주는 1.2%, 농촌 지역으로의 단순 이주는 6.8%로 조사되었음. 역귀농율을 산출하기 위해 전화번호가 있는 귀농인 명부를 가지고 전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컨택 성공은 총 251개로 이 중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는 20개로 조사됨. 변경된 주소지를 확인한 결과, 농촌 지역으로의 단순 이주는 17개(6.8%), 동 지역으로의 역귀농은 3개(1.2%)로 전체 역귀농율은 1.2%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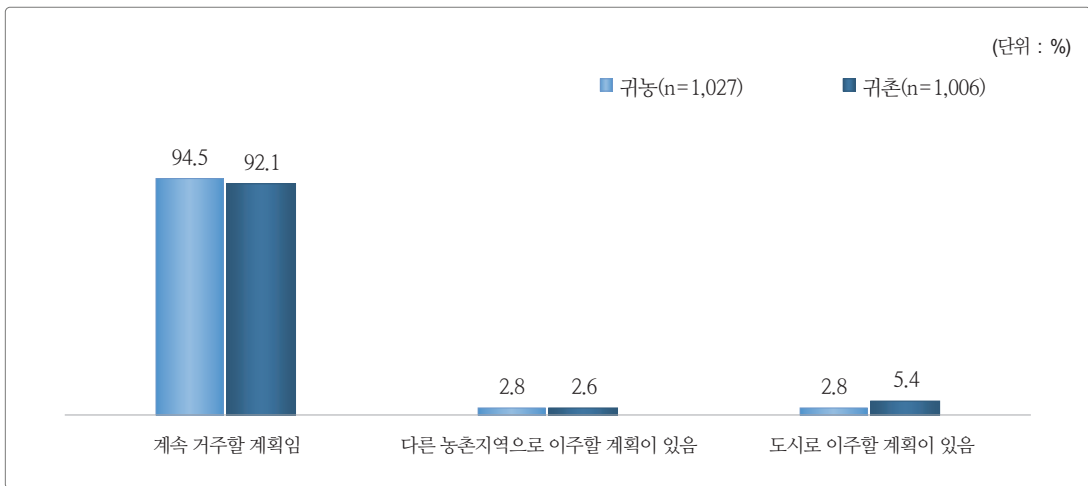
귀촌 후 정착율은 88.6% 수준으로 조사되었음. 역귀촌의 경우 전화번호가 없기 때문에 가구 방문 결과를 통해 유추하였는데, 방문결과를 살펴보면, ‘공가(사람이 거주하지 않음)’, ‘그런 사람 아님’, ‘주소 불명’ 등 역귀촌 가능성이 있는 표본은 전체의 16.9%를 차지함. 이 중 동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가 역귀촌에 해당하는데 본 조사의 현재 거주지역 지속 거주 의향을 살펴보면 귀촌 가구의 농촌지역 이주 계획은 2.6%, 도시 지역 이주 계획은 5.4%로 해당 비율을 적용하여 역귀촌 비율을 11.4%로 추정하였음

단, 귀농의 경우, 비수신과 결번, 거절 가구의 현황을 파악하지 못한 점, 귀촌의 경우 도시로의 이주 비율을 유사문항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할 점 등에서 한계가 존재하므로 해석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7. 현재 거주지역 지속 거주 의향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의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귀농 가구의 94.5%와 귀촌 가구의 92.1%가 계속 거주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다른 농촌으로 이주할 계획이 있다는 가구는 각각 2.8%와 2.6%로 조사되었으며 도시로의 역귀농/역귀촌 계획은 2.8%와 5.4%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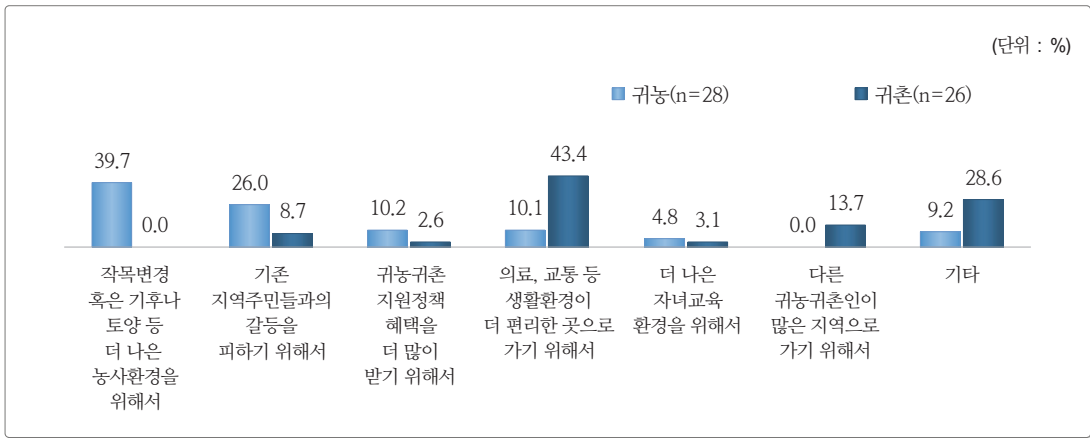
[그림 2-52] 현재 거주지역 지속 거주 의향



8. 타 농촌 지역 이주 희망 이유

다른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귀농 가구의 경우 ‘작목변경 등 기후나 토양 등 더 나은 농사환경을 위해서’(39.7%)라는 이유와 ‘기존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26.0%)라는 이유가 주로 언급되었으며, 귀촌 가구의 경우 43.4%가 ‘의료, 교통 등 생활환경이 더 편리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라고 응답함

[그림 2-53] 타 농촌 지역 이주 희망 이유



9. 역귀농/역귀촌 희망 이유

역귀농/역귀촌 이유로는 귀농 가구와 귀촌 가구 모두 ‘생활하기에 소득이 부족해서’가 가장 높은 가운데, 귀촌 가구의 경우 농촌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의료, 교통 등 생활환경이 불편해서’라는 응답이 37.3%로 높게 나타남

[그림 2-54] 역귀농/역귀촌 희망 이유

